

서울을
바꾸는
책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



서울연구원 지음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

서울을
바꾸는
책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



서울연구원 지음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보궐선거와 2014년 재선으로 제35대, 제36대 서울특별시장이 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설명하는 세 가지 열쇠어인 협치, 소통, 혁신은 이제 서울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려 결실을 맛보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민선 6기 중간지점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비전과 철학이 담긴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서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정리하고 기록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짧게는 민선 6기의 남은 2년, 길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더 좋은 서울 만들기를 위한 시정 철학과 방향에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책의 본문은 5장으로 구성했습니다. 1장에서는 ‘지속가능하

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중점으로 사회적경제, 경제인프라 구축, 관광 활성화 등 경제 분야의 성과를 기술했습니다. 2장은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라는 기조로 복지, 의료, 여성, 노동 분야의 성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사람이 먼저인 100년 도시정책'을 만들고자 도시계획, 도시재생, 안전, 교통, 보행, 푸른도시 분야의 성과를 담았습니다. 4장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주택, 교육, 문화, 환경, 남북교류 분야의 성과를 다루었습니다. 5장은 '변화의 시작은 소통'이라는 박원순 시정 철학을 사회혁신, 공공혁신, 지방자치, 소통과 협치 분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이 책을 시작으로 서울시 정책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서울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서울을 바꾸는 정책' 시리즈 작업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인간다운 삶, 새로운 도시, 꿈꾸는 내일,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인간다운 삶'은 임대주택 8만 호, 서울형 노동친화정책, 뉴타운 수습정책,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50+ 세대, 여성안심 특별시 만들기 등 민생 관련 성과를 담습니다. '새로운 도시'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소통과 개방형 서울시정 만들기, 사회혁신정책,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치시정 실현 등이 해당됩니다.

‘꿈꾸는 내일’에서는 보행친화도시, 채무 7조 원 감축과 주민 참여예산,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살림도시, 한양도성복원을 통한 역사도시 재조정 등 미래 관련 성과가 소개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본문 전체를 정리해준 안균오 도시발전소 연구소장과 조희정 작가께 감사드립니다.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해주신 서울특별시 기획조정팀에도 감사드립니다. 책을 예쁘게 꾸며주신 립霖 디자인의 김희림 대표, 편집 발간을 진행한 서울연구원 ‘서울을 바꾸는 정책’ 시리즈 편집부,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모두의 노고가 컸음을 압니다.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시리즈의 발간을 준비하며 작지만 아름다운 정책이라면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도시 서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그 가운데 이 책이 조그마한 길라잡이가 되길 또한 바랍니다.

2016년 6월
서울연구원 원장 김 수 현

CONTENTS

책을 펴내며 · 5

| 제1장 | 경제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제1절 일자리 창출 · 13
-  제2절 사회적경제 · 25
-  제3절 경제 인프라 구축 · 37
-  제4절 관광 활성화 · 49

| 제2장 | 복지 |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입니다

-  제5절 복지정책 · 61
-  제6절 의료정책 · 73
-  제7절 여성정책 · 83
-  제8절 노동정책 · 95

| 제3장 | 도시 | 사람이 먼저인 100년 도시정책을 만듭니다

-  제9절 도시계획 · 109
-  제10절 도시재생 · 121
-  제11절 도시안전 · 131

 제12절 도시교통 • 143

 제13절 보행도시 • 155

 제14절 푸른도시 • 167

| 제4장 | 미래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15절 주택정책 • 181

 제16절 교육정책 • 193

 제17절 문화정책 • 205

 제18절 환경정책 • 217

 제19절 남북교류 • 229

| 제5장 | 혁신 변화의 시작은 소통입니다

 제20절 사회혁신 • 243

 제21절 공공혁신 • 255

 제22절 지방자치 • 267

 제23절 소통과 협치 • 279

경 제

제
1
장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참으로 참혹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 없는 삶은 큰 고통입니다.
일자리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일자리 없는 경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일자리는 먹고사는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개인과 가족이 생존하는 근거입니다.
행복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제·사회적 분배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불평등 수준을 낮춰주는 가장 주요한 수단입니다.
서울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올려놓고
그 깃발을 높이 들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
1
절



일자리 창출



‘일자리특별시 서울’의 비전

경제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일자리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 가난, 불평등, 불안한 미래,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삶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

일자리는 먹고사는 문제의 출발점이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주는 삶의 위협에서 보호해주고 안전 사다리를 마련해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서울시는 서울형 유망산업인 R&D, 바이오, 의료, MICE, 관광 및 도시형 특화산업 육성, SOC 투자, 산업단지 중심 도시재생 등의 분야는 물론 민간투자 등 시정 전 분야를 망라하여 일

자리 창출 전략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청년, 여성, 어르신, 취약 계층 등 대상별, 영역별 특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경로를 확인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일자리 문제는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해나갈 수 없다. 내부의 역량과 외부의 환경이 함께할 때 비로소 창조적인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가 창출될 것이다. 이제 노동과 일자리에서 소외받는 사람 없는 ‘일자리특별시 서울’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성장이자 최고의 투자요, 최고의 복지이며, 최고의 행복을 열어줄 열쇠다.

일자리 현실

정부 일자리 창출 압박에 질(質) 낮은 계약직만 증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이나 비영리부문에서 단기적·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2011년 이후 매년 2조 5,000억 원에서 2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한 비율은

4.6~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시간에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몰아붙이다 보니 질(質) 낮은 계약직 일자리만 늘고 있다.

정부 실업률 통계 발표 이면의 허수에 슬퍼하는 청년실업

2015년 10월 취업자 수는 2,629만 8,000명으로 2014년 같은 달보다 34만 8,000명 증가하고, 같은 달 청년실업률은 7.4%로 2014년 같은 달보다 1.6% 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체감실업률은 10.5%를 나타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의 실천

일자리 현장에서 해법 모색, 서울 일자리 대장정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 10월 4주간 99개 현장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 해법을 시민들과 함께 설계했다. 또한 일자리 질에 주목하고, 민간기업·산업계·노동계 등이 함께 일자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3,900여 명의 시민과 450여 개 일자리 제안에 대한 공유를 통해 실질적 일자리 대책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집중지원 및 기업대상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시민의 기본적 노동권리가 보장되는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총 64개 사업, 1,903억 원의 예산을 2016년 예산에 반영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2013년 11월 전통시장 상인회-자치구-서울상인연합회-서울시가 동등한 관계의 협력·상생 공동협약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인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통시장 매니저 채용, 청년상인 아이디어 발굴, 장인 점포 브랜드화, 관광코스 개발, 전통시장 관광지도 구축으로 한류관광 명소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서울전통시장 진흥센터, 서울전통시장 상인회관, 전통시장 컨설팅사업단 등도 설치했다. 특히, 선도시장 5개소를 선정해 전통시장을 지역 경제 생태계 중심거점으로 육성하는 서울형 신시장 모델사업을 성

공적으로 추진했고, 2016년에도 318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도시형 제조업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특화산업 육성

서울시는 도시형 제조업 밀집지역을 서울형 특화산업지구로 지정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심제조업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성수 수제화산업, 종로 주얼리산업, 동대문 한방산업을 집중 육성했으며, 이후 종로의 인쇄·출판산업과 가구산업 등도 집중 육성하여 도심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심특화산업 육성정책은 2013~2014년 2개 부처 평가에서 대통령상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성수 수제화산업은 매출액이 증가했고, 종로 주얼리비즈니스 제1센터를 건립했으며, 주얼리 제2센터와 동대문 한방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 기회 제공,

질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서울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정책 대상 세분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 그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집단별 세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경쟁에서 배제되어 비노동력화, 유향 노동력화 되어가는 청년들,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해가는 청년들을 주요 타겟으로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5년 주요 추진실적 | 6월 말 기준 |



뉴딜일자리 사업

: 총 38개 사업 1,434개 일자리 제공(2014년 취업률 30.2%)

일자리플러스센터

: 취업률 46.7%(구직자 3,468명, 취업자 1,619명)

기술교육원

: 3,280명 교육 중(정규 2,978명, 단기 302명)

중소기업인턴십

: 2,459건 37억 6,700만 원 지원

: 2012년~2014년까지 채용자의 고용유지율 49.2%(2015년 5월 조사)

챌린지 1000 프로젝트

: 창업률 60.9%, 생존율 56.8%(2010년 6월~2014년 6월 창업기업, 2015년 4월 기준)

: 우수창업가 250팀 입주·지원, 교육(51회), 컨설팅(155회), 네트워킹(20회) 등

인생후반전 맞이한 베이비부머의 인생재도약,

50+ 베이비부머 응원프로젝트

높은 교육수준과 오랜 경제활동 경험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조기 은퇴의 길로 들어선 세대, 어르신으로

우대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식 세대와 또 다시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하는 이른바 ‘깁 세대’인 50대에 초점을 맞춘 50+ 베이비부머 응원 프로젝트를 2014년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동하였다.

우선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기존 2개소(은평, 종로)에서 2020년까지 2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권역별 정책 컨트롤타워인 50+ 캠퍼스도 2016년 6월 서북캠퍼스 개관식에 이어 2018년까지 권역별로 6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50+ 베이비부머가 재도약하는 데 일자리가 핵심인 만큼 ‘베이비부머 직업교육센터’와 ‘베이비부머 창업센터’를 각각 신설하는 한편,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사회공헌 일자리’도 발굴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면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전환하고 있다.

시니어포털 50+(senior.seoul.go.kr)를 오픈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그동안 추진한 50+ 베이비부머 정책의 향상을 위해, 8월 서울시 50+ 정책 공청회, 10월 베이비부머의 일과 삶을 주제로 ‘50+ 내일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세상을 바꾸는 50+ 일자리’라는 주제로 ‘서울시 중장년 인생이모작 한마당’을 개최하기도 했다.

오늘 이후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서울 일자리 대장정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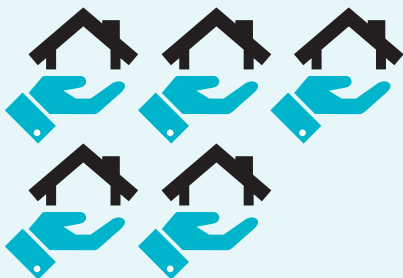
2015년 10월
4주간 99개 일자리 현장 방문



청년 등 계층별 일자리 정책 발굴 및
기업지원과 규제완화, 노동권리 환경 조성 기반 마련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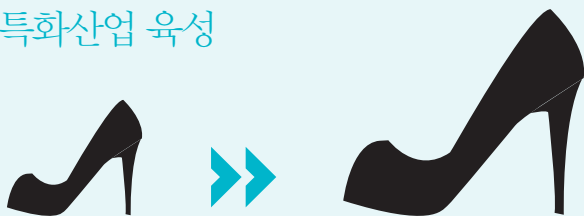
+5

2013년 11월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발표
(신시장 선도모델 5개소)



전통시장 상인회-자치구-서울상인연합회-서울시
동등한 관계 협력·상생 공동협약으로 추진

도심특화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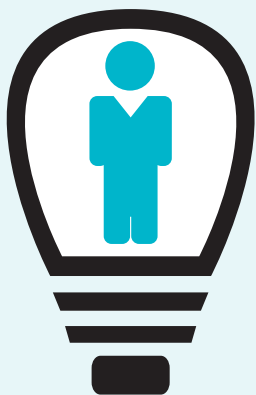


성수동 수제화산업 : 매출액 증가

종로 주얼리비즈니스 제1센터 건립,
주얼리 제2센터 및
동대문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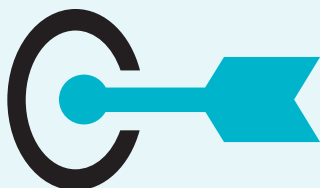
청년 일자리사업



11,122

2015년 청년 특화일자리 목표 1만 2,825개 중
1만 1,122개 제공

OECD 일자리사업 분류기준에 따른
5대 분야 총 35개 사업 집중 추진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중대한 도전과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빈부격차와 불평등 문제, 자원고갈과 에너지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저성장과 부족한 일자리 문제 등은
우리 눈앞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위기를 새롭고, 거대한 전환의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세계시민 모두 함께 더불어 잘사는,
‘또 하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길목의,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
2
절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서울’의 비전

우리나라는 1조 달러의 무역 경제규모로 전 세계 8위 수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한다. 살기가 힘든 출산을 기피해 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2000년 이후 성장 잠재력의 한계로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내년 이후는 2%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 184개 국가의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우리나라는 소득분배의 격차와 불균형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기 집 소유자 중 48.2%가 주택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과 이자부담으로 인해 자신을 ‘하우스 푸어(house

poor)’로 인식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지니계수는 0.409로 멕시코(0.524) 칠레(0.474)에 이어 OECD 34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아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나라이기도 하다. 독일은 국부(國富)의 64.5%를 창출하는 대기업이 일자리 40%를 담당하지만, 한국의 대기업은 국부의 62.3%를 창출하면서 일자리는 겨우 13.2%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처럼 위기를 새롭고, 거대한 전환의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이미 경제위기, 환경문제, 지역공동체 붕괴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생태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마을과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세계시민과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협력하는, 협심과 협업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현실

**취약한 산업구조와
심화되는 양극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계소득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상승했다. 즉 소득분배가 기업에 편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근로자 소득이 줄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는 OECD 24개국 중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다.

저성장·저고용·저출산·고령화의 사회패러다임 변화로 사회적경제 역할 부상

사회 양극화, 가족해체 증가, 인구 다원화, 근로빈곤층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영국(2006)의 경우 GDP 대비 2%,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비중이 5%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2011)의 경우 각각 0.04%, 0.1%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의 실천

글로벌 흐름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했고, 2014년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2015년에는 사회적경제 특구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회적경제 비중을 GRDP 대비 7%, 고용 대비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전 세계적인 협력과 연대를 위해 2014년 18개국 43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를 창립하여 서울시가 초대의장도시를 맡고 있다.

사람 중심의 함께서울 만들기 위한 사회적경제 주체 지원

사회 양극화, 가족해체 증가, 인구 다원화, 근로빈곤층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

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사회적경제 주체 규모는 총 2,801개 기업으로 증가했으며, 사회적기업 433개, 협동조합 2,249개, 마을기업 119개가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역시 2015년 500억 원 수준에서 2020년 전체 공공구매의 5% 수준인 3,5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4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을 통해 사회투자기금 531억 원 조성, 공공구매 678억 원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유로 행복한 서울, 공유도시 서울 추진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2012년 12월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해 공유도시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고, 2015년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유도시 서울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에서 공공시설 유희 공간 1,000여 개소 개방, 주거공유 66가구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민간부문에서는 나눔카 이용자 수 85만 명, 아이 옷을 공유하는 키플 8만여 건, 청년사회적기업인 우주를 통한 셰어하우스 16가구, 정장을 공유하는 열린 옷장 이용자 수 71만 명, 모임공간을 공유하는 온오프믹스 회원 수 40만 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 6월 현재 공유단체(기업) 77개, 공유 주차장

1,260면, 나눔카 이용자 수 89만 7,000명 등으로 확대되었다.

공유도시 서울의 성과로 서울시는 2014년 메트로폴리터스어 워즈 특별상을 수상했고, 포브스, 웨어러블 등 세계적인 언론에서 세계의 공유도시 모델로 소개되었으며, 국내·외 주요도시에서 공유도시 서울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공정한 가격 보상을 통한 윤리적 소비의식 확산,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공정무역은 2000년 초반 영국의 작은 마을 가스탕(Garstang)에서 시작하여 현재 23개국 1,100여 개 마을과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서울시는 공정무역도시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2012년 5월, ‘2012년 세계 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 개막행사에서 공정무역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세계적 공정무역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후 2012년 11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조례를 제정했다. 구체적 사업으로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와 함께 WFTO-ASIA 서울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아시아 공정무역 제품 전시회, 공정무역 캠페인, 공정무역 콘서트, 공정무역 시민대학 및 서울 공정무역 발전방안 연구 등 공정무역 교육·연구사업, 공정무역 커뮤니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본청의 시민청에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 도시농업 활성화

서울시는 2012년을 서울 도시농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은 도시 생태계 순환 구조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 형성, 로컬 푸드, 개인의 식생활 건강뿐 아니라 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 특히 서울을 세계 제1의 도시농업 수도로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자투리 땅을 활용한 공간 마련, 도시농업 교육 여건 조성, 마을 공동체 회복 기여, 교육과 연계한 어린이, 청소년 심성발달, 생태 순환형 친환경농업 실천, 농어촌 전문농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의 ‘도시농업 10계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광화문 벼농사, 시청옥상 양봉 꿀 수확, 노들섬 광화문 텃밭 운영, 화훼분재전문가 양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길목의,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2012

사회적경제과 설치 및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발표

2014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및
구매촉진 조례 제정



201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2015

사회적경제특구 추진



18 43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2014년 창립,
18개국 43개 기관 참여,
서울시 초대의장 선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



2,801

2015년 사회적경제 규모 2,801개
(사회적기업 433개,
협동조합 2,249개,
마을기업 119개)



5% 3,500



사회투자기금 531억 원 조성,
2015년 공공구매 678억 원
(2020년 5%, 3,500억 원 목표)



글로벌 공유도시 서울 추진



2012년 공유도시 서울 선언 및 공유촉진조례 제정,
2015년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 발표

2014



2014년 메트로폴리스어워즈 특별상 수상,
국내·외 주요도시 공유서울모델 벤치마킹



77 1,260 897,000

2016년 6월 기준 공유단체(기업) 77개, 공유 주차장 1,260면,
나눔카 이용자 수 89만 7,000명 등

민선 6기 서울의 성장 동력은 ‘서울형 창조경제’입니다.
서울형 창조경제의 중심은
사람과 다양한 산업 인프라입니다.
신촌·홍대·합정 밸리, 상암DMC,
동대문 창조경제클러스터, 구로G밸리, 개포ICT 등
5대 창조경제 거점과,
마곡, 창동·상계, 홍릉의 3대 지식기반 허브는
성장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10만 창조인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서울형 창조경제’는
성장의 과실을 시민 모두에게 나눔으로써
새로운 서울의 100년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
3
절



경제 인프라 구축



‘창조경제특별시 서울’의 비전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3% 내외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보다 성장률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본은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계·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집중됨으로써 비생산적인 요소로 전락해버렸고, 대도시 토지의 경우 비싼 가격으로 인해 토지 자체가 자본화되어 생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베이비부머들은 전통적인 경제활동인구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

고, 재도약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 여성, 어르신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형 창조경제의 핵심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산업 인프라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R&D, 관광·MICE, 레저·스포츠산업, 패션·의류산업, 바이오의료산업, ICT, 교육서비스 산업 등 서울 특유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 새로운 창조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다. 양재, 창동·상계, 상암DMC, 마곡, G밸리, 신홍합밸리, 개포, 홍릉, 동대문 등이 서울형 창조경제의 거점이 되고, 서울의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서울은 44개 업종, 136개의 전통적인 지역 특화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로 이를 잘 살려나아가야 한다.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를 지원하고,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진입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전통시장, 동네기업, 상점가, 전문상가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형 창조경제와 지역 특화산업, 서울을 이끌 이 두 양대 산맥이 역동적으로 살아 꿈틀거릴 때 서울은 비로소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태동할 것이고, 미래 100년의 서울을 이끌 힘이 될 것이다. 서울을 세계 창조경제의 수도이자 대한민국 창조경제특별시로 만들어갈 것이다.

경제 인프라 현실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산업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0년대까지 10%대를 유지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5.8%, 2010년 이후에는 1.8%로 빠르게 하락했다. 또, 공산품(제조업) 부문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0억 원 당 20.3명에서 2012년에는 8.5명으로 급감하는 등 산업 고용 창출력도 약화되는 등 국내 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HRI, 2015).

신성장 동력 발굴 지연과

서비스업 발전의 정체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비 10대 산업 수출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크게 확대되었다. 시기별 30대 품목 변화도 2010년 이후에는 3개 품목에 불과하다. 한편, 2014년 기준 명목 GDP의 59.4%, 전산업 취업자의 70.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27.0%, 일본의 23.3%, 독일의 22.3% 정도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도 낮다(HRI, 2015).

서울형 창조경제를 위한 서울의 실천

국제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삼성역 인근의 구(舊) 한국전력부지를 중심으로 종합운동장 재
생사업과 연계한 국제 업무 공간 조성, 전시·컨벤션 확충, 국
제 스포츠 메카, 대중문화산업 중심, 한강접근성 강화를 통해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공간인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월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
립해 발표했고, 구 한국전력부지를 현대자동차컨소시엄이 낙
찰받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을 확정했고, 현대차그룹
과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걸립을 위한 사전협상을 추진하고 있
다. 또한 종합운동장은 우리나라 스포츠와 문화엔터테인먼트
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아이디어공모를 2015년 실시했으며,
MICE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 최고의 MICE 도시로 도약
하기 위한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동북부 320만 일자리 창출의 거점,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경제적 활력 창출,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 물리적 환경개선 등을 통한 광역중심 위계의 신경제중심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동북부 320만 일자리 창출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창동·상계 신경제중심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지역주민과 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동북4구 발전 연구사업단의 서울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2014년 1월 동북4구 발전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또한 2015년 2월에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문화예술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우리나라 최초의 슈퍼아레나 건립계획을 일본 현지에서 직접 발표했다.

2015년 4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선도사업 프로젝트로 제안했으며, 서울아레나 사업실행의 첫 단추로 61개 컨테이너박스로 구성된 이색 문화공간인 ‘플랫폼 창동 61’을 조성하고 2016년 3월 본격 개장했다.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그린시티, 마곡첨단산업단지 조성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동북아 관문도시,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 혁신기지,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를 사업목표로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그린시티를 조성하는 마곡첨단산업단지 사업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첨단R&D 지식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2012년 마곡개발계획을 보완하여 발표했다. 2013년에는 마곡지구의 랜드마크로 식물과 호수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규모의 식물원인 마곡중앙공원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11월 착공했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주거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산업단지는 63%의 면적이 분양되었으며, LG그룹의 10개 계열사가 입주하는 LG사이언스파크와 코오롱 미래기술원, 이랜드 글로벌R&D센터 등이 기공식을 갖고 착공하였다.

서울형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단지 조성

서울 특유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새로운 창조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서울형 창조경제단지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릉지역 일대의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희대학교 등과 연계한 홍릉바이오의료클러스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디지털미디어시

티(DMC)로 이전한 개포동 일본인 학교 부지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구로·가산 디지털밸리인 G밸리를 미래 산업의 메카이자 창조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G밸리 비상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70년 제1호 민간산업단지로 조성된 온수산업단지를 ICT 글로벌 스마트산업단지로 재생시키기 위한 온수기술융합형(ICT) 스마트산업단지, 서울의 관문인 양재 IC를 중심으로 한 양재동과 우면동 지역의 유통 업무시설 약 41만m²를 주변 LG, 삼성, KT, 현대기아차 연구시설과 연계하는 양재·우면R&D지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첨단기술과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출, 도심형 특화제조업 업그레이드

서울의 도심 특화제조업을 첨단기술과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44개 업종, 136개의 전통적인 지역 특화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서울의 특성을 살려, 서울의 도심형 특화제조업을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잡고 살려나가기 위한 도전이다. 성수동 수제화산업, 종로 주얼리산업과 인쇄·출판산업, 장안평 자동차산업복합단지, 동대문 한방산업, 동대문 패션의류산업, 신촌·홍대·합정을 창

조문화 메카로 연계하는 신홍합밸리 등 도심제조업과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진입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전통시장, 동네기업, 상점가, 전문상가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지역·동네산업의 부활과 새로운 전성시대를 열어갈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신성장 경제거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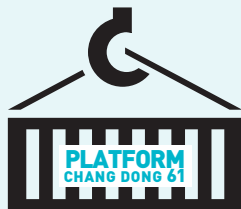
|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 |

2014년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한국전력부지 현대자동차컨소시엄 낙찰,
201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현대차그룹 사전협상 추진



| 창동·상계 신경제거점 조성 |

2014년 동북4구 발전방안 발표 및 슈퍼아레나 건립계획 발표,
2015년 국가 도시재생 선도사업 국토부 제안 및 선도사업인 플랫폼 창동61 추진



| 마곡첨단산업단지 |

2012년 개발계획 보완발표,
2013년 마곡중앙공원 계획 발표,
2015년 마곡중앙공원 착공,
2016년 6월 주거단지 100% 및 산업단지 63% 분양



100%



63%



서울형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단지 조성

홍릉 바이오의료클러스터,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G밸리 비상 프로젝트,
온수기술융합형스마트단지 조성, 양재·우면 R&D단지 등
서울형 창조경제단지 집중 육성

성수 수제화산업, 종로 주얼리산업, 장안평 자동차산업복합단지,
동대문 한방산업, 동대문 패션의류산업, 신홍합밸리 등
도심제조업 특화 및 창조경제 육성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메르스로 인해 발길을 돌린
외국관광객을 다시 서울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회의하기 좋은 도시 3년 연속 1위,
관광분야 3년 연속 컨벤션 5대 도시,
글로벌 MICE 도시 세계 4위의 영예를 자랑하던
서울이었습니다.

글로벌 관광비즈니스 도시 서울특별시의 명성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관광서비스 산업이
서울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광객 2,000만 서울’의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땀 것입니다.

관광객 2,000만이 되면 연간 42만 명의 신규 고용효과와
22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야흐로 서울의 황금알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관광산업이 다시 옛 명성을 되찾고,
경제를 살리는 황금알로 거듭나는

관광객 2,000만 도시 서울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제가 관광가이드로 나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4
절



관광 활성화



‘2,000만 관광도시 서울’의 비전

관광객 100명이 서울을 방문하면 2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산술적으로 2,000만 관광객 시대가 열리면, 22조 원의 경제효과는 물론 44만여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글로벌 MICE 산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다. MICE 참가자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보다 1.8배 높아 관광 측면에서 이익이고, 무역 측면에서도 외화 획득률이 88%로 분석되고 있다. 고용률도 제조업의 2배, IT 산업의 5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종합운동장 대규모 컨벤션시설 확충을 비롯해 MICE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TOP3 MICE 도시로 성장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의 관광산업은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백제 역사유적 발굴, 국세청 별관 철거를 통한 덕수궁 제모습 찾기, 한강 생태환경 복원 등 고대와 근대시대에 이르는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자연유산의 발굴·보존·보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울만이 갖고 있는 자산을 관광 자원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관광객 2,000만의 글로벌 관광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관광산업 현실

메르스 사태로

외래 관광객의 급감과 대규모 관광손실

2015년 8월 기준 외래 관광객은 659만 명으로 2014년 8월 동기간 759만 명에 비해 13.1%가 감소했다. 월별 기준으로 2014년 6월 102만 명, 7월 109만 명, 8월 117만 명에 달했던 외래 관광객은 메르스 사태 이후 2015년 6월 59만 명, 7월 50만 명, 8월 84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2015년 7~8월 인바운드 여행사 예약현황은 2014년 113만 명에 비해 82% 감소한 20만 명으로 축소, 손실액이 약 1,085억 원에 이르렀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우리나라 관광산업 경쟁력

관광산업 GDP 기여도는 한국 5.6%, 세계 평균 9.7%, 유럽 평균 9.2%이며, 고용 기여도는 한국 6.2%, 세계 평균 9.1%, 유럽 평균 10.2%로 관광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 관광경쟁력 순위의 경우에도 2015년 기준 29위에 머물러 있어, 주변국인 일본이 9위, 중국이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도시를 위한 서울의 실천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관광 활성화, “서울관광, 지금 이때다.”

2015년 6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방한을 취소한 외국 관광객이 14만여 명에 달하고, 그에 따른 관광수입 손실분도 1,2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되던 시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은 서울관광대책본부장’임을 자임하고, 2015년

8~10월 사이 “서울관광, 지금 이때다”라는 슬로건으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3개 핵심도시 로드쇼, 관광업계-경제계 공동의 서울관광선언, 서울광장에서 중국-일본-동남아 연예인들과 함께 개최한 K-POP콘서트 등 중화권과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직접 발로 뛰어다녔다. 그 결과 외래 관광객은 메르스 사태 이후 단 2개월 만에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3개월 지난 2015년 10월부터는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침체된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메르스 극복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추진성과



중국 로드쇼

- 중국 3개 도시에서 3박 4일 간 서울관광 거리홍보
- 영상 확산을 통한 총 560만 명 시청

원아시아 메가콘서트

- 2015년 10월 6일, 서울·중국·일본·동남아 공동 콘서트
- 총 890만 명 시청, 중국·일본·동남아 현지 방송

글로벌 서울마케팅 집중 추진

- 2015년 8~9월, 2개월간 추진
- 중국 초청 방송 프로모션
- 서울시내버스 서울관광 래핑 홍보

일자리 창출과 혁신산업의 기반, 글로벌 MICE 산업 육성

서울시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최신 정보와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혁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글로벌 MICE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2013년 서울 MICE 육성 마스터플랜(2014~2018)을 수립한 후 국제회의와 기업회의를 유치·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시는 3년 연속 회의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었고, 3년 연속 컨벤션 5대 도시로 선정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세계 컨벤션 개최도시 3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3년에 최고의 국제비즈니스회의 도시상(Best in Travel Awards) 수상, 최고 MICE 도시(Best MICE City)로도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와 종합운동장 부지, 서울시 소유인 SETEC 부지를 글로벌 MICE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는 한편, 서울 역세권개발사업과 마곡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등에 지역별로 특화된 회의 전시기능을 중심으로 컨벤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전시 컨벤션 시설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종합운동장 부지에는 코엑스와 연계한 10만 m² 이상의 대규모 컨벤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MICE 인

프라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TOP3 관광 MICE 도시로 성장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관광 및 서비스산업 육성, 한강 관광 자원화 프로젝트

2014년 8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강 및 주변지역의 관광 자원화 추진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중앙정부와 관련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2015년 8월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 자원화 추진방안’을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한강협력계획이 과거와 다른 점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분야별 연구기관이 한강 TF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조화시켰다는 점과 우선 추진할 지역(여의-이촌권역)과 22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2019년까지 총 3,981억 원이 투자되는 한강 관광 자원화 프로젝트는 약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서울 일부지역에서 쇼핑 위주로 관광하던 외국인들이 한강을 매개로 색다른 문화적, 생태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서울 관광 활성화



2011년

781



2015년

1,041

| 외래 관광객 증가 |

2011년 781만 명 → 2015년 1,041만 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0~2015 추계치)>, 서울방문비율 기준으로 추산)

2015년 메르스로 6~9월 감소된 외래 관광객이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4년	677,507	712,365	910,253	1,006,105	996,643	1,023,996
2015년	721,721	826,906	974,419	1,089,654	1,050,025	590,978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089,221	1,169,079	1,001,605	1,059,256	898,388	873,601
2015년	495,603	841,550	949,723	1,088,975	905,108	878,646



| 세계 컨벤션 개최도시 |

2008년 이후 5년간 연속 5위 → 2015년 3위로 도약

2012
~
2015



2012~2015년
최고 국제비즈니스회의 도시상 수상

2013
/
2015



2013년, 2015년
최고 MICE 도시 선정

제 2 장

부 지

“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입니다

”

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낭비는 더욱 아닙니다.
복지는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아울의 저축이며,
미래에 대한 최고 수익의 투자입니다.
복지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장이
반드시 복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히려 복지가 성장을 견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OECD 국가 최하위의
복지수준이라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임을 저는 선언하고자 합니다.

제
5
절



복지정책



‘복지특별시 서울’의 비전

시민이 행복하면 도시가 행복해지고, 도시가 행복해지면 국가가 행복해진다. 복지는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다. 이상이 아닌 현실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가치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실존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나가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길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그 중심에 복지가 있다.

복지는 바로 ‘기회’를 주는 이름이자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복지는 사회적 책임이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다져주는 신뢰와

연대의 보루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불평등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며 사고의 대전환을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도 사고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복지는 낭비나 소모, 시혜가 아니다. 복지는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제 우리는 복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을 이뤄내고, 창조경제를 이뤄내 그 결실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러므로 복지는 경제요, 성장이요, 분배요, 민주주의요, 인권이다.

우리의 복지 현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OECD 국가 중 최하위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인 28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프랑스의 31.9%나 핀란드의 31%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무상보육,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의 중앙정부 공약, 돈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무상보육,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은 모두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통령은 재정부담과 관련해 “보육 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속을 깨고 지방정부로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2013년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서울시의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0~2세 무상보육 재정부담의 몫까지도 책임져야 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를 위한 서울의 실천

4년 만에 2.5배나 증가한 복지예산, 삶의 질과 질적 성장 견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 특별시장’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2016년 복지예산으로 서울시 최초로 8조 원을 넘어선 전체 예산의 34.4%인 8조 3,452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취임 당 시인 2011년과 비교해 금액 기준으로 1.9배, 예산 비중으로 1.5

배나 증가했다. 늘어난 복지예산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전달체계 혁신으로 복지패러다임 전환

서울시 행정 혁신과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한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공간이었던 동주민센터를 주민 복지의 허브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2015년 7월부터 13개 자치구 80개동을 시작으로 2016년 6월까지 283개동, 2017년에는 서울시 전체 424개의 동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5년에만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와 같은 복지플래너 407명을 충원했으며, 2017년까지 2,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민 복지기준, 시민과 함께 만든 전국 최초의 복지헌장

서울시는 서울시민이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시민참여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5대 분야(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를 설정했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

중인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2016년 시급 7,145원으로 결정되어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18.5%) 더 높게 책정되었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2015년 9월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시민 9만 4,179명을 신규 발굴해 지원하였다.

누구도 찾지 않는 복지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송과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마련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6월 총 13만 2,692명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했고, 이러한 성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의 경우 2012년 20만 371명에서 2016년 6월 27만 554명으로 35%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9.2%나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누리는 복지, 희망온돌 따듯한 겨울나기 프로젝트

서울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간자원 발굴, 기부·나눔 문화 확산, 취약계층 특별보호 등 겨울철 서민 특별보호대책인

‘희망온돌 따듯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9월 총 26만 8,000여 가구를 발굴·상담하여 19만 3,000여 명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 및 민간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130여 명의 ‘더함복지상담사’를 채용해 저소득 소외계층 4만 9,566가구를 방문 상담하고, 2만 6,890가구를 지원하였다.

잠들지 않는 장애인 종합대책, 장애인 24시간 상시 활동 지원체계 구축

2012년 4월,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기주도적인 정책개발과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2014년 2월에는 장애인 인권 구현을 위해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해변캠프 및 가족휴가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 운영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제돌이의 꿈, 동물복지 종합계획

박원순 서울시장은 돌고래쇼 중단과 불법 포획된 돌고래 야생 방류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전격적으로 제돌이의 귀향을 결정했다. 제돌이는 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7월 18일 제주도 푸른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시아 최초의 돌고래 야생방류 사례인 제돌이 귀향스토리는 2013년 10월 미국 올랜드 디즈니랜드에서 열린 ‘제68차 세계 동물원수족관 협회(WAZA) 정기총회’를 통해 전 세계 50여 개국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제돌이의 귀향을 계기로 2014년 5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생명 중심 서울을 위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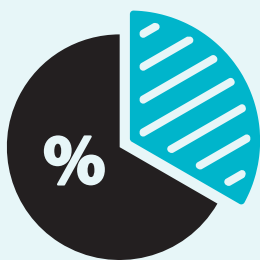
복지는 공자도 아니고
낭비는 더욱 아닙니다.

복지는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율의 전축이며,
미래에 대한
최고 수익의 투자입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서울시 복지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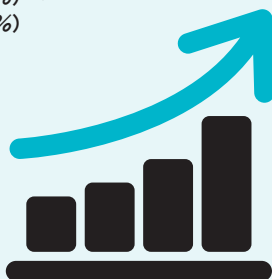


34.4%

2011년 4조 3,726억 원(23.5%) →
2016년 8조 3,452억 원(34.4%)

8조 원

복지예산 8조 원 초과,
금액 대비 1.9배 증가, 비중 대비 1.5배 증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2015년 80개 동

2016년 283개 동

2017년 424개 동(전체)

80

283

424



| 복지 플래너 총원 |

2015년 407명

2016년 1,036명

2017년 2,000명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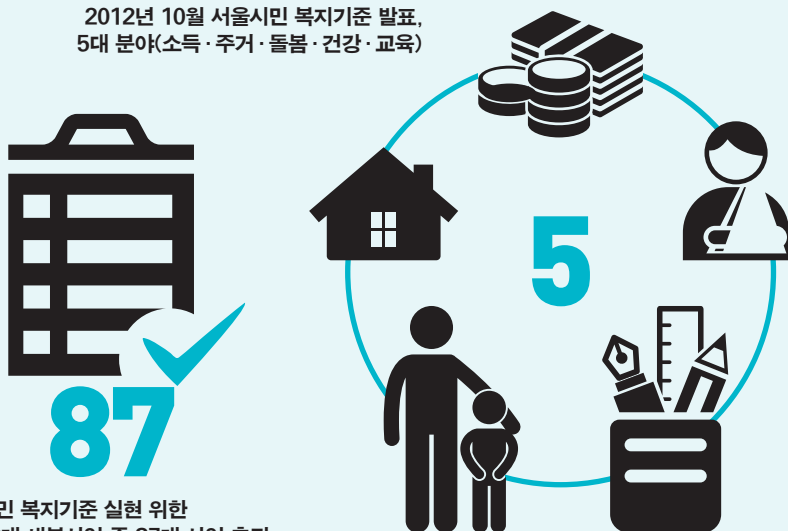
1,036

2,000



서울시민 복지기준

2012년 10월 서울시민 복지기준 발표,
5대 분야(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서울시민 복지기준 실현 위한
총 102개 세부사업 중 87개 사업 추진,
서울형 생활임금제 및 기초보장제도 도입 성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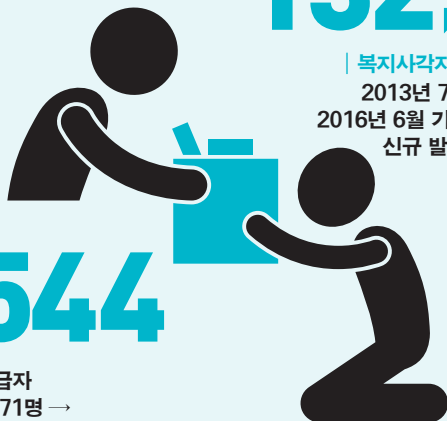
132,692

|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 |

2013년 7월 시행 이후
2016년 6월 기준 13만 2,692명
신규 발굴 및 지원

270,544

기초생활수급자
2012년 20만 371명 →
2016년 6월 27만 544명
(35% 증가, 전국 19.2% 감소)



지금 여러분의 체온은 얼마입니까?
36.5도, 건강한 사람의 체온이지요.
그런데 이 체온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서울의 현실입니다.
모든 시민은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건의료 영역에서
시민들의 건강할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서울 36.5’는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따뜻하고 건강한 서울,
모두가 함께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만드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제
6
절



의료정책



‘건강서울 36.5도’를 위한 서울의 비전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된 지금 서울시의 사망률은 줄고 평균수명은 늘어났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사망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2009년 기준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 자치구와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인 자치구 사이에는 43%의 차이를 보였다. 부의 격차가 건강에까지 격차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스스로 건강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과 계층과 지역에 따른 건강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첫 울음을

터트린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돌봐주고, 보건소가 예방접종도 책임진다. 한창 개구쟁이 짓을 할 나이인 초등학생 때는 평생 건강을 위해 식생활부터, 주치의제도를 통해 이 닮는 습관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준다. 한창 일할 나이인 중년층도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동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부터 건강관리까지 한 번에 상담해준다. 방문 간호사를 늘려 움직임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찾아 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서울시는 모든 시민에게 건강할 권리를 보장한다. 사전에 병을 예방하고, 아플 때는 최대한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로서의 권리와 치료를 보장해나갈 것이다.

공공보건의료 현실

**감소하는 사망률과 공공보건지출,
증가하는 기대수명과 의료취약계층**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은 2000년 6명에서 2014년 3명으로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76세에서 82세로 선진국들과 동등한 수준에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GDP 대비 총 보건지출은 7%로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이다. 특히 공공보건지출은 4%

로 선진국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지역 간 건강 격차는 심화되고 있고, 의료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한계를 보여준 국가적 감염병 대응체계

2015년 5월 20일, 최초 감염자 발생 이후 감염자 186명, 사망자 38명(사망률 20.4%), 누적 격리자는 약 1만 6,000명에 달한 메르스 사태가 2015년 한 해 한국의 사회적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국가적 전염병 대응체계는 한계를 보여주었고, 국민들은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다.

보편적 공공의료정책을 위한 서울의 실천

신속한 메르스 사태 대응과 감염병 종합대책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최초 감염자 발생 당일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건기획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시 방역대책본부를 즉시 설치해 대응하였다. 삼성서울병원 35번 환자 확진 판정 이후, 6월 4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시장이 직접 방역대책본부장을 맡기로 하는 등 메르스의 대규모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대규모 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메르스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메르스 피해기업과 전통시장 및 예술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속히 실행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추진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 차원의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2015년 11월, 시립병원 음압격리병실을 2018년까지 5배 이상 확대하는 등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민을 위한 촘촘한 보편적 공공의료정책, 건강서울 36.5

서울시는 2012년 7월, 서울시민 모두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없이 적정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보편적 공공의료정책, ‘건강서울 36.5’를 발표했다. 취약계층만의 의료라는 편견 속에 놓여 있던 공공의료 개념을 시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강화하고, 건강한 공공의료 정책 추진으로 시민 건강을 365일 꼼꼼히 챙기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정책 발표 이후 시민 건강 주치의 도입, 우리 아이 주치의 도입, 노인건강증진센터 구별 설치,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시행, 보건지소나 시립

병원과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등의 사업을 통해 서울시 공공의료체계를 한 단계 향상시켰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신체적 부담 완화,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은 2013년 1월부터 서울의료원을 통해 시행되었다. 서울의료원 180병상을 대상으로 시작한 환자안심병원은 2016년 6월 현재 서울의료원 500개 전체 병상을 포함한 555병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환자안심병원은 반값 의료비와 반값 장례비 정책 등과 연계되어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대폭 낮춤으로써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공공의료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

2027년 노령인구가 서울시 인구의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 10월, 박원순 서울 시장은 제2인생설계 지원, 맞춤형 일자리, 건강한 노후, 살기 편한 환경, 활기찬 여가문화, 존중과 세대통합의 6대 분야 35개 정책으로 구성해 행복한 노년과 인생이모작 도시를 위한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014년 4월에는 치매요

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조기 검진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3년 37.2%에서 2020년 80%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 장기요양 인프라 시설도 대폭 확충하여 요양수요 대비 시설이용 충족률을 2013년 62.3%에서 2020년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자살예방을 위한 마음이음 1080 프로젝트

박원순 서울시장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청소년과 어르신 자살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2013년 5월,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문화조성 및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밀착형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울시 최초의 자살예방 종합대책, ‘마음이음 108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자살예방을 위한 힐링캠프, 생명사랑센터, 생명사랑축제, 마음이음 콘서트, 한강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서울시 자살률이 2012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이후 급속히 높아지던 65세 이상 자살률이, 2011년부터 다소 줄기 시작해 2014년에 23% 낮아졌으며, 청소년 자살률 또한 2006~2007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감염병(메르스) 대응 종합대책



2015년 11월 19일
음압격리병실 2018년 5배 이상 대폭 확대 등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 발표



2015년 6월 4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메르스 긴급 기자회견 및
투명한 정보제공과 대응체계 전환



보편적 공공의료정책

36.5

2012년 7월
사전예방, 건강관리 강화 등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발표



건강수명 2015년 73.9세 → 2020년 77세 확대,
자치구 사망률 격차 2009년 43% → 2020년 33%

73.9 >> 77

33%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2012년 7월
보호자 없는 병원 등 건강서울 36.5 발표
2013년 1월
환자안심병원 계획 발표

555



2016년 6월 현재
서울의료원 500병상 전체 등 총 555병상 운영

행복한 노년, 어르신 종합계획



2012년 10월 어르신 종합계획
2014년 2월 돌봄서비스 현장시장실
2014년 4월 치매요양 종합대책

치매조기검진
2013년 37.2% → 2020년 80%



80%

“여성이 웃어야 서울이 웃는다.”
생각할수록 멋지고 맞는 말입니다.
서울시 행정도 결국에는 사람의 일입니다.
어디든 살펴보면 여성이 웃는 가정, 사회, 국가가
운기 나고, 여유 있고, 행복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모든 정책에
여성의 관점과 여성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금년도를 실질적 성평등 시정의 원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
7
절



여성정책



‘여성안심특별시 서울’의 비전

서울시는 2012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여성이 건강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평등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했다. 2013년에는 여성안전에 중점을 둔 여성안전 종합대책, 여성안심특별시 만들기를 발표했다. 또한 2014년에는 지난 10여 년간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는 서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문제를 극복하고자 경력·마을·일터를 살리는 여성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2015년에는 여성의 지역 활동을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다변화된 여성들의 삶이 각자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존재감을 확보하고, 개인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아 기르는 것,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양성평등 가치의 확산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제 성평등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것을 미룬다면 우리 사회는 편향된 인권 의식 수준에 갇히게 되는 것은 물론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다양한 창의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서울시 여성정책 비전은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이자, 서울의 삶을 바꾸는 여성이다. “여성이 웃어야 서울이 웃는다.”

여성의 경제활동·고용률 현실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6.9%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인 78.2%보다 크게 낮고, 여성 고용률의 경우도 54.6%로 남성 75.1%와는 큰 차이가 난다.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7%로 회원국 평균인 62.8%보다 낮으

며 OECD 국가 중 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여성가족부, 2015. 4).

돌봄지원 등 일·가족 양립기반 미흡으로 지속되는 저출산

여성 고용률 확대와 일·가족 양립기반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돌봄 지원과 모성보호 취약,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저조 등으로 일·가족 양립이 어려운 여건이다.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1983년 대체출산율(2.1명 이상)이 무너졌고, 2005년에는 초저출산(1.30 이하) 국가로 접어든 이후, 2014년 기준 1.21명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서울의 실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정책,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서울시는 2012년 2월, 저출산 문제 해결, 여성의 일·가족 양립기반 마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기준으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10.8%로 나머지 88.9%의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용 아동 정원도 전체 아동의 23.2%에 불과하며, 대기자는 10만 명(1개월 이내 입소 가능자 3만 8,000명)으로 입소신청 후 평균 1~3년 정도를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이후 민선 5기인 2012~2014년 동안 총 296개소를 확충하여 2016년 6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전국 최고 수준인 20.2%까지 끌어올렸다. 민선 6기인 2014~2018년에는 1,000개를 추가로 확충하는 등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8%까지 높일 계획이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서울의 삶을 바꾸는 여성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3월,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발표했다. 실질적 성평등 정책, 여성의 삶을 바꾸는 정책, 여성이 주체가 되는 정책을 기조로 여성이 평등하게, 여성이 자립하게, 여성이 건강하게, 여성이 안전하게, 여성이 걱정 없게, 여성이 잘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최초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했고, 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1년 15.8%에서 2014년 19.1%로 확대되었고, 투자출연기관 이사회 여성비율

은 2011년 19.4%에서 2014년 36.4%로, 서울시 법정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2011년 28.6%에서 2014년 37.3%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 및 서울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종합계획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는 서울형 가족정책을 발표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안전한 서울,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2013년 3월, 여성안전에 중점을 둔 여성안전 종합대책,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만들기를 발표했다. 출퇴근길의 불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심지어 집 안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무서움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갈증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안전망, 환경안전망, 교통안전망 등 3대 영역 5개 분야 16개 체감형 정책들로 구성했다. 지하철 보안관 171명 채용, 지하철 차량 내 CCTV 2만여 대 설치, 택시안심키가서비스(카드, NFC)는 한 해 동안 약 55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은 19개소 운영하고 있고, 총 34개의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성매매위기 10대 여성에 대한 상담은 연간 1만여 건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4년 한 해에만 자립학교 입학인원 99

명, 중·단기 일자리 제공 1,700명의 성과를 달성했다. 여성안
전마을,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등 시민 체감형 여성
정책은 2015년 6월,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경력·마을·일터를 살리는, 서울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2014년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력·마을·일터를 살리
는 서울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취업알선과 교육 위
주의 여성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경력을 살리고, 취
미가 일이 되는 일자리를 지원해 마을을 살리며, 여성노동자의
복지를 지원해 일터를 살리는 정책이다. ‘챌린지 1000 프로젝
트’와 중소기업 인터십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00개 이상의 여
성기업 및 1만 명 이상의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경력단
절 예방과 직업훈련 지원 등을 위한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와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4개 분야 43개 사업 3만 2,855명의 공공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였다. 또한 78개의 여성협동
조합 설립 지원, 16개의 협동조합 성공모델 발굴 등 여성의 사
회적경제를 조직화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늦은 여성 귀갓길 안전을 책임지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2013년 6월, 여성의 늦은 귀갓길에 안심스카우트가 동행해 귀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를 15구 시범 구에 495명을 배치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2014년부터는 전체 자치구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주중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홀로 귀가하는 여성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신청하면 2인 1조의 안심스카우트가 동행해 집 앞까지 바래다주는 서비스다. 이는 여성동행귀가와 취약지역 순찰 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적합한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어디든 살아가보면
여성이 웃는 가정, 사회, 국가가
윤기 나고, 여유 있고, 행복합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12년 2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본계획 발표

|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

2011년 10.8% →

2016년 6월 기준 20.2%(전국 최고) →

2018년 28%(목표)

28%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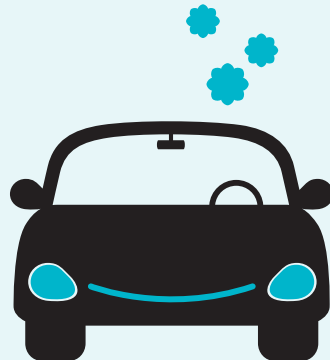
2013년 3월

여성안전에 중점을 둔 여성안심특별시, 여성안전 종합대책 발표

사람안전망: 안심귀가스카우트, 마을파수관, 지킴이집, 여성안전마을

환경안전망: CPTED, 흉방범서비스, 여성안심택배, 골목길 조명개선

교통안전망: 안심귀가버스, 여성안심택시, 안전지하철 3대 영역 11개 정책 집중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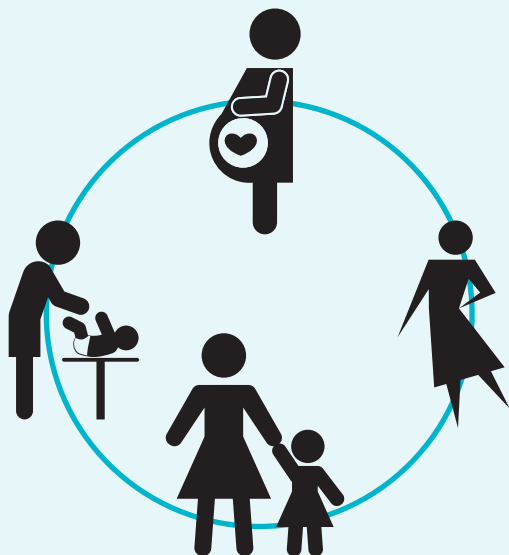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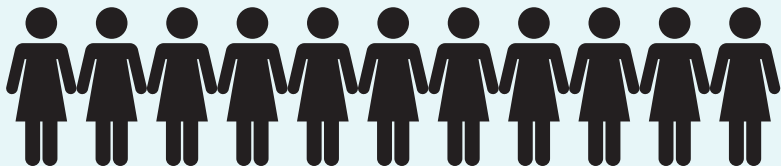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2012년 3월

여성이 건강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울 비전 발표



2012년 성평등위원회 출범 및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투자출연기관 여성비율 2011년 19.4% → 2014년 36.4%,
위원회 여성비율 2011년 28.6% → 2014년 37.3% 확대



36.4%

37.3%

비정규직의 증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또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근간을 튼튼히 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는
인식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
8
절



노동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

노동에 대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다. 서울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일자리노동국과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노동행정 개념을 도입해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비정규직 7,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단순히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다. 노동 상식을 회복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박수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규직이 필요한 곳에는 정규직을

고용해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창조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서울시의 노동비전은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의 인상 및 생활임금의 확산, 노동이사제 도입 등 참여와 협력의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소통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현실

201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627만 명

2015년 8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2.5%를 차지한다. 2014년에 비해 19만 명이 늘어났고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 비율이 35.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가장 낮다. OECD 평균 단기근속자 비율(16.5%)과 장기근속자 비율(36.4%)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소득불평등 심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과 임금인상률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4%였으나, 동기간 평균 임금인상률은 2.5%에 불과하다. 한국 취업자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8%에서 2013년 69.5%로 대폭 하락했다.

상식적인 노동 사회를 위한 서울의 실천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2015년 4월, 가족이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을 위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을 포함한 61개 단위과제로 정립한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권과 노사분쟁조정권이 없어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고, 권한과 여건이 제한적이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동의 존엄함을 실천하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이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되는 일이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을 위해 2016년 12월까지 목표치인 7,296명 중 2016년 6월 현재 6,974명(95.6%)의 공공부문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서울시는 서울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과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을 누리고, 동시에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개념의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6년 최저임금 대비 1,115원 많은 7,145원으로 책정되었다.

2015년 10월에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 4개 기관이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업무협약'을 체결해 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노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권리 선언 및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발표

2013년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자리에 대한 권리, 일터에서의 권리, 취약근로자의 권리, 신뢰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기본권, 서울시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노동권리 선언을 통해 노동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높은 등록금, 생계유지, 취업난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한 첫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자는 약속을 담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권리장전은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 사용자의 의무, 서울시의 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르바이트 청년과 사용자를 위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취약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센터 및 노동복지센터 설립 운영

2011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성동과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외에 2012년 구로근로자복지센터와 노원노동복지센터를 추가

로 설치해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근로의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종합노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2015년 2월 서울시립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하여 노동(근로자)복지센터의 컨트롤타워 및 광역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차원의 지원기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노동권익센터는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법률지원,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건강 및 산업안전 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 4월에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발표해 노동법 사각지대 취약근로자의 권익침해예방과 권리구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과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청년아르바이트권리지킴이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2014년 11월 시민 생활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8개 투자·출연기관의 변화·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조직혁신방안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참여형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자에게 경영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자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 경영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높임으로써 발전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는
인식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노동존중 서울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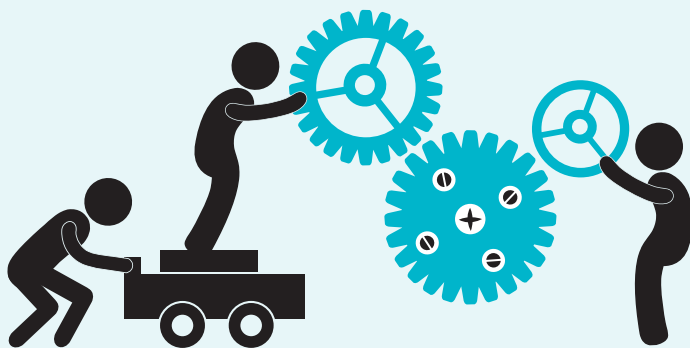


2012년 9월 노동정책과 신설

2014년 3월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2014년 11월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2015년 4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6,974



2016년 12월까지 목표치인 7,296명 중
2016년 6월 현재 6,974명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6,687



7,145



2015년 6,687원(최저임금 대비 1,107원 상승),
2016년 7,145원(최저임금 대비 1,115원 상승)
적용 대상 : 공공부문 직접채용 근로자 약 1,260명(2016년 기준)
→ 서울시 민간위탁 노동자로 확대 추진

도시

제
3
장

“

사람이 먼저인,
100년
도시정책을
만듭니다

”

한번 개발하고 건축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고,
몇십 년, 100년까지 계속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은 100년을 내다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서울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도시계획,
나아가 위대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제
9
절



도시계획



‘행복한 시민도시 서울’의 비전

왜 새로운 도시계획 100년이 필요할까? 한번 개발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개발의 비가역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도시도 한번 지으면 100년은 가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경험했다. 파이시티, 뉴타운 사업, 파인트리, 용산개발에 이르기까지, 크고 깊은 난제들이었다.

이러한 첨예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서울을 둘러보고, 한강에 배를 띄워 토론회도 갖고, 전문가들과 한양도성도 둘러보았다. 개별사안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얻은 깨달음은 도시계획의

철학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개별 사안대로 원칙에 맞게 정상화시켜나가되,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그 결과 3년여의 기간에 걸쳐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그리고 100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지켜져야 할 도시계획의 가치인 ‘도시계획헌장’을 2015년 9월에 발표했다. 또한 일반 시민 100명이 직접 참여한 국내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2013년 4월에 발표했다. 2,000년 역사를 가진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시민의 자부심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줄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2015년 5월에 발표했으며, 최초의 한강과 주변지역의 종합 관리계획인 ‘한강변관리 기본계획’을 2015년 10월에 발표했다. 그리고 2030 서울플랜을 기반으로 5대 생활권 116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새로운 미래 100년의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담고 서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저성장 시대의 고착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미래적 요소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 도시계획의 현실

압축적 고도성장 시대에

물리적 시설 확장 중심의 도시계획

1912년 경성시구개수계획,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근대적 도시계획의 기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압축적 고도성장 시대의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를 신속히 공급하고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경관, 역사문화유산, 지역공동체와 사람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공공기관에 의한

획일적인 도시계획

전국 시·도 2030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인구를 모두 합하면 1억 명이 넘는다. 2030년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 통계청의 공식적인 통계추이와 비교하면 마술과도 같다. 도시기본계획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도시의 물리적 성장만을 고려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획일적인 도시계획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2,000년 도시 서울의 도시계획을 위한 실천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

서울시는 2013년 9월, 일반 시민 1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여 전국 최초로 수립한 203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인 경성지구개수계획이라는 시가지 정비 계획이 발표됐다. 2013년은 그로부터 100년을 맞는 원년으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서울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서울의 미래상으로 제시한 2030 서울플랜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도시계획 근대화, 나아가 위대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훼손되지 않을 도시계획의 가치와 원칙, 서울 도시계획헌장

2015년 9월, 시대가 바뀌어도 훼손되지 않을 도시계획의 가치와 일관된 원칙을 담은 서울 도시계획헌장을 발표했다. 도시계

획가, 행정기관 등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이 도시를 살아가는 다양한 시민들의 3년여에 걸친 공감과 합의를 통해 국내 최초로 제정된 것이다. 총 10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서울 도시계획헌장은 미래 100년 서울 도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헌법 역할을 하며, 시대가 바뀌어도 훼손되지 않을 도시계획의 가치와 일관된 원칙으로 활용된다. 10개 조문은 자연환경보전, 역사문화보전, 대중·녹색교통, 생활안전, 친환경 에너지절감, 조화로운 경관, 장소성, 참여와 소통, 배려와 공존,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다.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도심의 관리원칙과 방향, 역사도심 기본계획

2015년 5월, 2,000년 서울도심 내 역사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양도성 전체지역 관리원칙과 방향을 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역사문화중심지 조성을 위한 실행 기반으로, 시민의 삶과 역사가 함께하는 도심 실현을 위한 공간관리계획을 제시한다. 서울시가 2,000년 고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 역사를 간직한 한양도성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통해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 세계 유수의 역사도시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역사문화 중심지로 바뀌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강과 주변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최초의 종합 관리계획, 한강변관리 기본계획

2015년 10월, 지난 20여 년간의 한강 관련 계획을 아우르고 기존 계획과 연속성·정합성을 유지하는 한강변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법정 최상위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근거를 두고 수립한 최초의 한강 관련 기본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2013년), 한강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2015년) 등에 연속성을 유지한 계획이다. 한강변관리 기본계획은 한강과 한강변 제방 밖(양안) 0.5~1km 범위(서울시 총 면적의 13.5%)를 대상으로 하며, 4대 부문(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 12개 관리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공공의 선제적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역할 강화, 공공개발센터 신설

2012년 9월, 공공의 선제적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공공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국 내 공공개발센터를 2012년에 신설했다. 공공개발센터는 노들섬, 국세청별관, 남산예장자락, 수색역세권과 석유비축기지, 대규모 사유지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그 과정에서 특화·전문화된 조직의 전문성을 기

반으로 도시의 장기적인 전략계획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도시개발 과정에서 전문가협업, 민관협력, 시민공감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공디벨로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공간 환경 전반에 대한 코디네이터, 총괄건축가제도

2014년 9월, 서울시의 모든 공공 건축물, 도시계획, 조경, 공공 시설물 등 공간 환경 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건축가제도를 도입하고, 제1호 총괄건축가로 승효상 이로재 대표를 위촉했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등 도시 건축물의 역사와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지만, 국내에서는 서울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서울의 주요 공간 환경사업 총괄기획 및 자문 등 사전검토, 서울시 공간 환경 관련사업 부서 간 상호 협력 및 조율, 국내·외 도시들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한다. 총괄건축가제도 도입을 통해 서울의 건축과 도시의 일관된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2,000년 수도 서울에 걸 맞는 도시와 건축물을 만들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했다.

새시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서울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2030 서울플랜



2013년 9월
시민 100명이 직접 참여한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 발표

2015년 9월 도시계획현장 발표,
지역생활권계획 등
100년 도시계획의 기본 틀 완성

100



역사도심 기본계획



2015년 5월
한양도성 전체지역 관리원칙 및 방향을 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 발표

2,000년 역사문화 도심을
세계와 만나는 한국의 역사문화 중심지로
육성·보존·관리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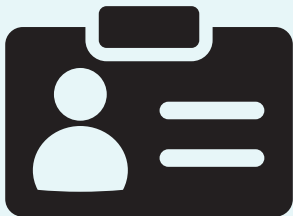


2015년 10월
최초의 한강과 주변지역의 종합 관리계획인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발표

2013년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2015년 한강자연성회복 및
관광 자원화 종합계획과 연계



공공개발센터 & 총괄건축가제도



2012년 9월
도시재생(개발) 과정에서 시민참여와 공공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개발센터 신설

2014년 9월
공간 환경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자문을 위한
국내 최초 총괄건축가제도 도입



소외·낙후된 지역을 정비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각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서울다운 도시재생을 이루며,
물리·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실현하는 것이
서울시 도시주거재생의 비전입니다.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담는
통합과 공유의 재생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제
10
절



도시재생



‘사람이 중심인 도시 서울’의 비전

지난 반세기 동안, 서울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인구는 1964년 342만 명에서 2014년 1,038만 명으로 증가했고, 주택은 1975년 74만 세대에서 2014년 355만 세대로 확대되었으며, 1인당 GDP는 1961년 불과 95달러에서 2014년 2만 8,739달러로 대폭 성장했다. 한국전쟁의 복구와 산업화, 도시의 확장 및 신시가지 개발, 균형발전과 경제성장 등 시대별로 각기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도시 공간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동안 서울은 투기 열풍에 휘말렸다. 급속한 성장과정에서의 걸만 번지르르하고 화려했던 뉴타운·재개발의 역사를 이제는 뒤로할 때다.

2012년 1월,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을 중단하면서 주거는 인권을 선언했다. 종전 투자자 중심의 개발이익 관점에서 접근했던 뉴타운·재개발은 거주자 중심, 사람 관점으로 방향을 이동했다. 전면철거를 통한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은 이제 서울시의 사전에는 없음을 선포했다. 사람 중심의 주거지 관리와 공동체 회복이 그 근간으로 자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존과 같은 전면철거 방식의 사업 관행을 바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 생태계가 유지되고, 지속가능한 주거지가 되는 방식으로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주민과 기업과 공공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 지역이 두루 발전하고 혜택을 함께 누리고 함께 잘사는 도시재생, 미래세대의 삶의 질까지 담아내는 함께 행복한 도시재생, 사람이 중심인 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서울 도시개발의 현실

**총선 선거공약 남발,
전국을 투기 열풍으로 몰아넣은 뉴타운 사업**

2008년 18대 총선의 뉴타운 공약은 전국을 투기 열풍으로 몰

아넣었다. 뉴타운 사업은 전국을 불합리가 만연하고 고착화된 비정상 사회로 만들었다. 원주민 축출, 마을공동체 해체, 동네상권 붕괴, 전세가 폭등, 사회갈등 증폭, 아파트공화국 등 골목길과 정든 이웃은 사라지고, 서민들은 갈 곳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

소외된 사람,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못한 결만 화려했던 도시개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전쟁의 복구와 산업화, 도시의 확장 및 신시가 지 개발, 균형발전과 성장인프라 확보 등 시대별로 각기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도시 공간이 개발되어 왔으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의 도시개발은 소외된 사람들과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의 실천

새롭게 쓰는 뉴타운의 역사, 뉴타운·재개발 신정책 구상

2012년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업의 추

진과 해제를 결정하고, 거주민 중심의 대안적 재생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뉴타운·재개발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610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와 866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조정을 병행하고, 시장과 구청장이 책임을 공유하면서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2013년 4월, 1년여간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대한 추진현황을 발표했고, 2015년 4월에는 수습방안 3년의 성과와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신정책구상 발표 이후 3년 동안 주민설명회 620회, 주민협의체 525회, 교육 105회, 실태조사관 활동 1,717회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245개 구역을 주민 뜻대로 해제했고, 추진 주체가 있는 327개 구역에 대해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진로를 결정하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다.

사람이 중심인 도시,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플랜

2015년 3월,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위한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했다. 민선 6기 핵심키워드인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을 담고, 실행력에 무게를 둔 서울시 최초의 종합적 재생계획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공간에 재생이 이루어져 왔

지만, 사람이 소외되고 서울의 자산과 미래세대도 고려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과거를 반성하고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한편,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100년 서울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2015년 4월에는 지역맞춤형 재생으로 함께 누리는 삶을 만들기 위한 주거재생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전체에 대해 그동안의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 중심에서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시스템 구축과 집단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재생 추진방안이 담겨 있다.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27개 선도 지역 선정

2015년 3월 발표한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플랜, 2015년 4월 발표한 주거재생 실행방안을 토대로 낙후되고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재생을 추진하는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 사업 지역은 쇠퇴·낙후 산업지역 3개소, 역사·문화자원지역 7개소,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5개소, 노후주거지역 12개소 등 총 4개 유형의 27개 지역을 선정했다. 27개 선도 지역에는 민간투자 촉진, 통합적 계획수립,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 1.3조 원이 2018년까지 우선 투자된다. 과거처럼 일률적인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민이 주축이 되어, 그 공간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정비방식을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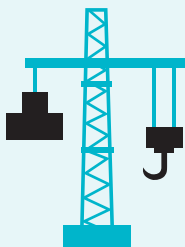
창신·송인, 창동·상계, 중앙정부 도시재생 선도 사업 참여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가급적 서울시는 배제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원사업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3년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된 창신·송인 지역이 2014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는 등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2015년에는 창동·상계 신경계중심지를 경제기반형 선도 사업으로 신청했으며,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뉴타운·재개발 신청책 추진

2012년 1월 뉴타운·재개발 신청책구상 발표, 2013년 4월 뉴타운 수습방안 추진현황 발표



2015년 4월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발표
(324개 구역 실태조사, 245개 구역 해제)

324 - 245

서울시 도시재생 종합플랜



2015년 4월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삶터,
주거재생 실행방안 발표

2015년 3월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위한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플랜 발표



서울형 도시재생 27개 선도 사업 추진

2015년 3월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통해 4개 유형, 27개 선도 지역 선정 및 발표



27



총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2018년까지 마중물 사업으로 1.3조 원 투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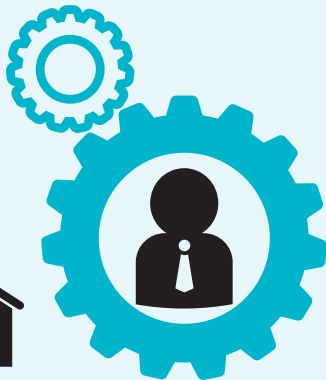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선도 사업 적극 참여

창신 · 승인 :

- 2013년 지구 해제
- 2014년 근린재생형 선도사업 선정 및 활성화계획 고시

창동 · 상계 :

- 2015년 경제기반형 선도사업 신청
- 2016년 선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안전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는 다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가 나면 문제가 다 나옵니다.
현장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리와 연결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작동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안전은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챙기고 예방하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안전은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제
11
절



도시안전



‘시민안전특별시 서울’의 비전

서울을 걷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보도블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뭘 하겠나 하는 스트레스가 있다. 연말만 되면 늘 파헤쳐지는 보도블록에 시민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서울시민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도로 위에서 보낸다. 마땅히 도로 위에서 행복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보도블록 10계명, 아스팔트 10계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30~50년이 경과된 정비대상 노후 관로를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전수조사 할 계획이며, 정비대상 노후 하수관로 3,686km 중 정비가 시급한 50년 이상 하수관로 932km를 우선 2018년까

지 약 1조 원을 투입해 정비할 계획이다. 34개소의 수해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관거 통수능력 확대, 빗물 펌프장 신·증설, 빗물저류조 신설, 하천정비 등과 물순환 개선 등을 통해 더 이상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이 도시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 것이다.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시정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지켜야 할 제1의 원칙이다.

서울 도시안전의 현실

빠르게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자연재해

21세기말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4℃, 강수량은 17% 증가하고, 그로 인해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강한 태풍의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19%→26%) 전망된다. 1999~2008년의 10년간 우리나라 1일 10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빈도는 385회로, 1970~1980년대 222회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연재해는 과거보다 더 빠르고 규모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급속한 도시 시설물의 증가와 노후화로 대도시의 도시안전 위협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을 이루었다. 통계청에 의하면 세계 도시화율은 지난 1970년 36.6%에서 2015년 54%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40.7%에서 8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는 고층건물, 도로 시설, 지하시설, 생활시설 등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으나, 동시에 해당 시설물의 노후화 역시 급속히 진행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시안전을 위한 서울의 실천

시민과 함께 대비하는 수해대책, 수해안전 종합대책

2012년 5월, 서울시는 과거 시설확충에 방점을 두었던 서울시 수해안전대책을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촘촘한 재난 대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수해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 대비, 시가 주도하는 방재사업이 아닌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반영한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방재대책 추진했다. 또한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꼼꼼하게 대비하며 산사태와

같은 대형 피해 방지, 건강한 물 순환 체계 구성 등의 5대 방향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특히 피해가 많은 34개 저지대 침수 위험지역을 특별 관리해 피해 예방에 주력하여 광화문, 사당역, 강남역, 도림천, 신월지역 등 3년간 12개 침수 취약지역 수해 예방사업을 완료했다. 그동안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맞춤형 수해안전 대책을 착실히 실행한 결과, 폭우·폭설·폭염 등 수해를 포함한 모든 재해재난에 있어서 2011년 사망 16명, 부상 2명 등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2012년 이후 수해예방은 물론 모든 재해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2012년 0명, 2013년 0명, 2014년 0명 등 재해재난 인명피해를 제로수준으로 달성하고 있다.

물환경 악화, 물순환 왜곡을 해결하는 건강한 물순환 도시 서울

서울시는 2013년 10월, 물환경 악화와 물순환 왜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962년 7.8%에 불과했던 불투수율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2010년 47.7%까지 급증했다. 불투수율의 급격한 증가는 물순환을 왜곡해 증발이나 침투는 줄고, 표면유출만 급증시키고 있으며, 이는 홍수 위험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100년간 세계 기온이 0.74℃ 증가하는 동안 서울

의 기온은 2.5℃로 급속히 상승하여, 증발산의 감소와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해 지하수위는 저하되고 하천은 말라가고 있다. 빗물의 유출 증가는 수질오염 또한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건강한 물순환 회복을 위해 공공의 선도, 각종 개발사업 적용, 민간 지원방안 마련, 연구개발과 제도정비를 추진하되 이 모든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실천방향을 담고 있으며, 2050년까지 연 평균 강우량의 40%인 620mm를 저류·침투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보도 60년 관행의 마침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서울시는 2012년 4월, 보도블록시장을 자임하며 시민들의 빼앗긴 보행권을 되찾고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여 서울을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했다. 보도블록 10계명은 보도공사 실명제 실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공사현장 보도안전 강화,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 보도블록 파손 원인자 부담제 시행,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보도블록 파손 스마트 폰 신고제 도입, 보도위 불법 주차차·적치물·오토바이 단속 강화, 보도블록 은행 운영, 협의체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보도관리 등이다.

2015년 3월, 보도블록 10계명 3년의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939개의 보도공사 실명제판 설치, 입찰제한 6개 업체, 부실별점 부과 4개 업체, 과태료 부과 108개 업체, 공무원 징계 7명, 보행안전도우미 2만 3,658명 운영, 겨울철 보도공사 전면 중지, 보도블록 원인자 복구 682건, 거리모니터링단 연 인원 3,149명, 4만 7,991건 제보, 보도블록 파손 온라인신고 1만 5,000건, 불법 주정차 등 시행 전 대비 2배 이상 단속, 보도블록 16,844m² 비축, 정책토론 총 41회 개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보도공사와 관련된 정책의 보행자 평균 만족도가 78% 수준에 이르렀다.

도로 위 지뢰, 포트홀 등을 제거하는 차도혁신 프로젝트

2013년 4월, 도로 일제정비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도로시설 개선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도로는 총 연장 8,198km, 총 면적 83.61km²로 고속국도의 2배, 일반국도의 60%에 이르러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파손 위주의 보수와 교통량 증가 등으로 노후화 포장 면적이 34.1%에 달하고, 보수비용 역시 600억 원 이상의 수준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잠실 도로함몰 사고에서 경험했듯이 폭우·폭설 등 이상기후와 지하철 공사 등 도시 시설물의 급증으로, 포트홀이나

도로함몰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원순 시장은 근본적인 도로안전을 위해 2013년 11월, 도로 위의 지뢰라고 일컫는 포트홀 대책 ‘서울시 아스팔트 10계명’을 발표했다. 아스팔트 10계명은 ‘편안한 운전, 강력한 현장 관리, 매끈하게 달린다, 도로는 과학이다, 단 한 번도 안 돼, 이름을 걸자, 예방이 최선이다, 365일 안전하게, 도로포장의 프로, 협력이 힘이다’ 등 10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9월에는 그동안의 도로안전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도 관리 혁신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안전하고 평탄한 서울도로를 비전으로 하는 차도관리 혁신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는 2026년 노후 포장도로 완전해소라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챙기고 예방하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안전은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수해안전 종합대책



2011년 사망 16명, 부상 2명 등 18명의 인명피해 발생,
2012년 수해안전 종합대책 발표

취임 이후
2012년 0명,
2013년 0명,
2014년 0명 등
재해재난 인명피해 제로수준 달성



물순환 종합계획



2013년 10월
물환경 악화와 물순환 왜곡 해결 위한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종합계획 발표

40%
620mm

2050년까지 연 평균 강우량의 40%인
620mm를 저류·침투 관리목표 추진



보도블록 10계명



2012년 4월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는 보도블록 10계명 발표

3,149

거리모니터링단 연 인원 3,149명,
신고 10만 35건(2016년 미포함)



포트홀 등 차도혁신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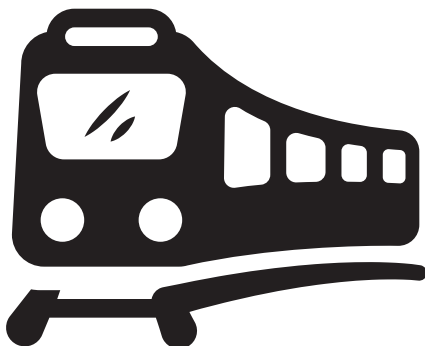
2013년 4월 도로일제정비 대책 발표,
2013년 11월 서울시 아스팔트 10계명 발표



2015년 9월
차도관리 혁신 프로젝트 발표

서울시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을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두고
향후 10년 이내에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지하철역에 접근 가능한
철도 및 보행 중심 교통체계로 재구성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우려하는 수요 과다예측 등
경전철 민자 사업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제
12
절



도시교통



‘교통특별시 서울’의 비전

혼잡하고 불편했던 서울의 교통은 지난 20년 사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통선진도시로 발돋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2년 지하철 9호선은 일방적으로 과도한 요금인상(안)을 발표했고, 민간투자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대중교통의 노후화 및 지진 등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투자 비용 증가로 공공의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다.

2013년 10월, 1,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볼모로 일방적 요금인상을 발표한 9호선 문제가 해결되었다. 단순한 요금인상 포기가 아닌, 운임결정권 서울시 회수, 독자적 요금인상 차단, 최소운영보장방식의 비용보전방식 전환, 공공사업에 시민

펀드 최초 도입 등 민간투자사업 전반을 혁신하는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새롭게 구축했다. 시민의 이익과 권리에 부합하고, 서울 교통의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의 서울 교통정책이 ‘차량·소유·성장’에 가치를 두었다면, 새로운 교통정책의 핵심가치는 ‘사람·공유·환경’이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 20년을 이끄는 서울 교통정책 비전은 나침반이 되어 2030년,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특별시 서울’로 진화될 것이다.

서울 교통의 현실

자동차도로 중심의 정책으로 증가된 과도한 에너지 소비구조와 환경오염

과거 교통정책은 ‘승차난·주차난·소통난’의 세 가지 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도로를 확충하고 소통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 소비구조, 환경오염물질 과다배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서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중 교통 부문이 31%를 차지하고, 대기오염물질의 61%가 도로 이동원으로부터 배출되고 있으며, 교통혼잡비용은 2010년 기준 연간

7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민간 중심의 대중교통 확충으로 공공재정 악화 및 노선운영 효율성 저하

버스, 택시, 지하철, 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확충이 민간투자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일방적인 요금인상과 과도한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등으로 공공의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시민을 불모로 한 노선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정작 시민들은 눈높이에 맞는 대중교통의 혜택을 고르게 받지 못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교통을 위한 서울의 실천

2030년 승용차 없이도 이동이 편리한 교통특별시, 서울 교통비전 2030

서울시는 2013년 5월, 향후 20년 서울 교통의 장기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서울 교통비전 2030’을 발표했다. 과거의 서울 교통정책이 ‘차량·소유·성장’에 가치를 두었다면, 서울 교통비전 2030은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

는 ‘교통특별시’의 비전과, ‘사람·공유·환경’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사람이 중심인 교통, 함께 이용하는 교통,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 등의 세 가지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 통행량은 30% 줄이고, 대중교통 평균통근시간은 30% 단축되며, 녹색교통수단의 이용면적 비율을 30% 확대하는 ‘트리플 (Triple) 30’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어디서나 도시철도 10분,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2013년 10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철도중심시대를 비전으로 하는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고, 2015년 6월 국토교통부의 확정·승인을 받았다. 향후 10년 동안 신림선·동북선·면목선·서부선 등 10개의 도시철도 노선을 추진해 서울시내 철도 소외지역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종합계획에 따라 2015년 3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종합운동장 2단계 구간이 개통되었고,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2016년 1월 시운전을 가졌다. 신림선 경전철은 2015년 9월 기공식을 했으며, 동북선 경전철도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지하철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로 사업 재구조화

2013년 10월, 지하철 9호선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발표했다. 이 혁신모델은 단순히 요금인상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임결정권 서울시 회수, 독자적 요금인상 차단, 최소운임보장방식의 비용보전방식 전환, 공공사업에 시민펀드 최초 도입 등 민간투자사업 전반을 혁신하였다. 사업시행·운영자인 맥쿼리는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철수했고, 사업재구조화로 최대 3조 2,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등 시민의 세금인 공공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결과였다. 시민의 이익과 권리에 부합하고, 서울 교통의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의 발이 되는 심야 전용버스, 울빠미 버스 운행

2013년 4월, 울빠미 버스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2013년 9월 운행 성과를 반영, 심야 전용버스를 9개 노선으로 확대하여 본격 운영하게 되었다. 3개월간 시범운영한 2개 노선 심야전용 시내버스가 22만 명 이용이라는 높은 호응과 88%에

달하는 시민 확대 요구에 따라, 30억 건의 통화량 데이터를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강남·홍대·동대문·신림·종로 등에 실제 심야시간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을 고려하여 7개 노선을 추가했다. 올빼미버스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과속방지장치 및 격벽 등 안전시설 강화, 낮 시간대 운전을 금지하는 등 심야버스 운전자 처우 개선,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 집중 단속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한 결과, 1일 6,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2013년 올해의 서울시 10대 뉴스에서 1위에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견인, 서울시 공공자전거 확대정책

2014년 11월, 자전거 이용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서울시 공공자전거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자전거는 대도시의 교통, 환경,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예방적 대안이며 특히,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내 5대 거점을 중심으로 공공자전거 2,000대를 보급하고, 150개 이상의 스테이션을 촘촘히 설치했다. 2014년 10월에는 국내 최대의 자전거 축제를 개최했고, 2015년 5월에는 자전거친화마을을 기존 3개소에서 9

개소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자전거를 2017년 1만 대까지 늘리고, 2020년까지 2만 대 이상을 설치해 서울시 전역에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공공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 서비스혁신 종합대책

2012년 12월, 전국 최초로 택시 운송수입금에 대한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택시 운송수입금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 10월에는 택시 서비스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요금인상이 실질적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종합대책에는 택시 승차거부 감소, 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안전 강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 강화, 택시업계 경영개선 지원, 택시업계 영업환경 개선, 택시관리체계 효율화 등 7개 분야의 37개 과제를 담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지하철역에 접근 가능한
철도 및 보행 중심 교통체계를
재구성하겠습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서울 교통비전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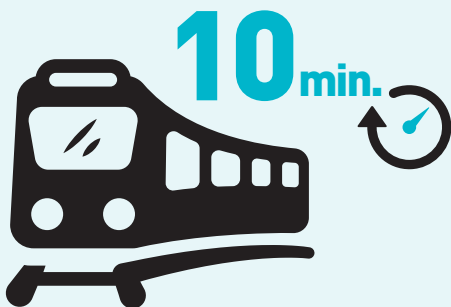
차량, 소유, 성장의 가치에서
사람, 공유, 환경의 가치로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



2013년 5월
2030년 승용차 없이도 이동이 편리한
서울 교통비전 2030 발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2013년 7월
서울 어디서나 도시철도 10분 시대를 여는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발표

2013년 10월
대중교통 민간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 발표





올빼미 심야버스



2013년 4월 심야버스 시범운영,
2013년 9월 24시간 시민의 밤이 되는
올빼미 버스 발표

6,000



빅데이터 30억 건 활용,
일평균 이용자수 6,000명,
2013년 서울시 10대 뉴스 1위 선정



공공자전거 정책



2,000

저비용·고효율의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5대 거점 공공자전거 2,000대 확대 보급



2014년 11월
생활교통수단으로 사람중심 교통문화를 견인하는
공공자전거 확대계획 발표



보행친화도시 서울의 비전은
길을 걸으면서 한 번쯤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됐습니다.
부지불식 자동차에 종독되어 있던
도시 체질을 천천히 바꿔,
시민 모두가 걸어서 해결하고,
걷는 데서 해답을 찾는,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제
13
절



보행도시



‘보행친화도시 서울’의 비전

집과 인도를 찾길에 내주던 시대에서 벗어나 어느새 우리는 강변뿐만 아니라, 가로수 그늘이 짙푸른 도심 인도에서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했고, 2014년 인도 10계명을 발표했다. 인도를 비우고, 가로 시설물을 모으고, 횡단보도 턱도 없앨 계획이다. 한마디로 사람이 주인인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걷는 도시 서울, 걷기 편한 서울 만들기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걷게 될 길은 만족, 합법, 안전, 배려 위를 걷게 될 것이다. 도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도를 보행자의 안전을 담

보하고, 누구나 걷기 편하도록 개선해 선진보행도시로의 전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걷기 편한 서울의 시작이자, 모든 시민
이 보행권을 보장받고, 서울을 행복한 보행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서울 보행친화도시 비전은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한 번쯤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됐다. 부지불식 자동차에 중독되어 있던 도시 체질을 천천
히 바꿔 시민 모두가 걸어서 해결하고, 걷는 데서 해답을 찾는,
말 그대로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서울의 보행권 현실

보행권을 침해당한 생활도로, 그리고 걷기 어려운 도시

서울시 전체 도로의 78%가 12m 미만 생활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활도로를 걷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보도 폭을 최소 2.0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횡
단보도 부재로 인한 무단횡단 위험, 자동차가 점령한 생활도
로, 250여 개소의 육교·지하보도, 들쭉날쭉한 보도 폭 등 실제
보행자가 체감하는 보도 폭의 정도는 매우 좁은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 등 급속한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권 대응 미흡

서울시 교통약자는 총 인구 대비 22.0% 수준이며, 전체 교통약자 중 고령자가 42.2%로 가장 많고, 영·유아동반자(18.4%), 어린이(17.9%), 장애인(17.8%), 임산부(0.8%) 순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20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행권은 생명권, 신체 안전권, 신체 활동권과 같은 범주의 인권에 해당된다. 보행권과 관련된 정책이 절실하다.

보도혁신을 위한 서울의 실천

서울이 걷는다, 사람이 웃는다, 보행친화도시 서울

2013년 1월, 보행 관련 모든 정책과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을 발표했다. 서울의 보행환경에 대한 문제점으로 횡단보도 부재로 인한 무단횡단 위험, 자동차가 점령한 생활도로, 시내 250여 개소의 육교·지하보도, 들쭉날쭉한 보도폭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걷는 즐거움을 재발견하는 쾌적한 거리, 차는 천천히, 사람

은 편안하고 안전한 거리, 장애물 없이 어디로든 통하는 편리한 거리,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있는 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행전용 거리인 신촌의 차 없는 거리 조성, 세종로의 매월 차 없는 거리 운영, 연세로 등 보행친화구역 조성, 어린이 보행전용 거리 아마존 조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서울 둘레길 및 도심보행길 조성, 서울역 고가 7017까지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의 인도가 달라진다, 보도혁신 프로젝트

서울시는 2014년 12월 서울시 보도혁신 프로젝트 2탄으로, 서울의 인도가 달라지고, 사람이 주인인 거리를 만드는 인도 10계명을 발표했다. 보도혁신 프로젝트 1탄은 2012년 4월,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는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제11절 도시안전정책 참조). 인도 10계명은 “인도는 도시의 기본이며, 보행자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며, 누구나 걷기 편해야 한다는 기본 철학 하에 비우겠습니다, 모으겠습니다, 낮추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깨끗이 하겠습니다, 예쁘게 하겠습니다, 체계화 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등의 10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 중심의 녹색 보행 공간,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9월, 미국 하이라인파크 현장시찰을 통해 서울역 고가를 사람 중심의 녹색 시민 보행공간으로 재생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2015년 1월, 노후되어 수명을 다한 서울역고가 총 938m를 차량 길에서 사람 길로 재생하고, 서울역 광장, 북부 역세권 등으로 통하는 17개의 보행로를 연결하는 구상을 구체화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 고가의 재생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선호지역인 명동, 남산, 남대문 시장 등과 서울역 주변이 역사·문화·쇼핑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보관광시대가 열리게 되어 서울의 명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과거 전면철거가 아닌 보전의 방법으로 재생하여 서울역 일대 재생의 촉매가 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선도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5년 5월 지역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담은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고, 2015년 11월 30일 서울경찰청 교통체계개선안 승인에 따라, 2015년 12월 13일 0시를 기해 서울역고가 차량 통행금지가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람이 주인인 지역 문화·경제의 거점, 대중교통전용지구

2014년 1월, 서울시 최초 대중교통과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개통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보행자를 비롯해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다닐 수 있으며,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차량이 30km/h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Zone 30’으로 운영된다. 보행자 중심의 상징적 공간인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친화도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 되고, 지역 고유의 문화적 콘텐츠가 생산·유통되고, 침체됐던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운영 6개월 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34.5% 감소했으며, 시민 만족도가 58% 포인트(12%→70%) 높아졌다. 또한 시민 방문은 11.1% 증가했고, 점포 방문율은 28.9% 늘어났으며, 매출 건수는 10.6%, 매출액은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이외에도, 2013년 12월 명동, 이태원 등 5개소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지역 맞춤형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더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

보편적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014년 1월, 보편적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과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고려한 특수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계획이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이면 서울시내 307개 모든 지하철역의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해지고, 2025년에는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대체된다. 보도의 턱 낮춤 기준은 현재 1cm 이하로 개선은 되었으나, 0cm로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걷는 데서 해답을 찾는,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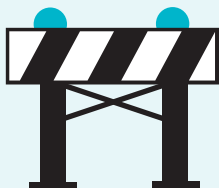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2013년 1월 보행 관련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발표
쾌적한 서울 거리, 안전한 서울 거리, 편리한 서울 거리, 이야기가 있는 서울 거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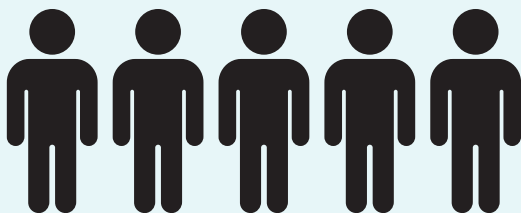
보도혁신 프로젝트



2012년 4월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는 보도블록 10계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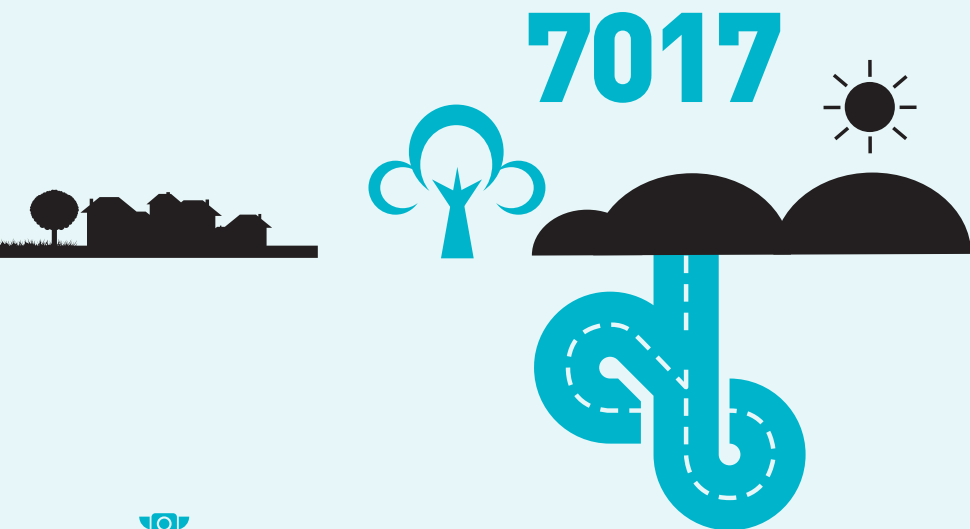


2014년 12월
서울의 인도가 달라진다, 사람이 주인인 거리,
인도 10계명 발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2014년 9월 뉴욕 하이라인파크 현장시찰을 통해 서울역 고가 녹색 보행 공간 재생구상 발표
2015년 1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발표, 2015년 5월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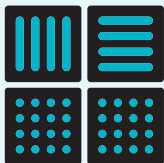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4년 1월

보편적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발표



2015년 12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발표



공원은 우리 삶의 시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배제되어 왔던 공공의 공간인 공원에
이제 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를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푸른도시 선언은 산이 지키고 강이 키워온
시민들의 삶을 담았습니다.
시민이 머무는 그곳이라면 어디든
푸르른 자연이 함께하여
누구나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제
14
절



푸른도시



‘푸른도시 서울’의 비전

녹지 공간은 우리 삶의 시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소이다. 이제 사람이 배제되어 왔던 공공의 공간인 공원이나 녹지에 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를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힘과 산이 지키고 강이 키워온 시민들의 삶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이 사는, 머무는 그곳이라면 어디든 푸르른 자연이 함께해 누구나 녹색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도시는 본래 공유의 플랫폼이다. 이제 서울은 자연과 역사 문화의 힘을 공유하여 더불어 키워내고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서울시는 “① 서울은 산이 지키고 물이 살리는 생명의 땅이

다, ② 서울은 역사가 살아있고 시민들의 이야기가 깃든 도시이다, ③ 서울은 공원이다, ④ 공원은 재해로부터 시민과 도시를 지켜준다, ⑤ 공원은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쉼터가 된다, ⑥ 공원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의 장이 된다, ⑦ 공원은 푸른 일터가 된다, ⑧ 시민은 유아에서 노년까지 녹색복지를 누린다, ⑨ 시민이 공원의 주인이다”라는 내용의 ‘푸른도시 선언 9개 조문’을 선포했다. 함께 만들고 가꾸고 지켜나가는 시민 중심의 공원도시! 삶을 재충전하는 발전소, 이웃들이 소통하는 사랑방, 그리하여 시민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숲의 도시! 이제 서울은 건강한 푸른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녹지부족도시 서울의 현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복지 공간, 녹지 공간의 부족

최근 들어 녹지는 접근성, 연계성, 안정성 등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단순히 휴식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복지와 직결된 녹색복지의 개념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녹지비율은 30.2%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2014년, 환경부). 지

속기능한 도시환경의 보전과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자연재해재난으로 위협받는 녹지 공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었다. 도시화는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 녹지 공간은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 녹지는 지난 2001년 253.13km²에서 2013년 239.17km²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뒤 2014년 240.33km²로 다소 증가한 상황이다. 녹지 비율은 30.4%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공원 면적은 16.37m²로 작지 않은 수준이지만, 영국 등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녹색복지를 위한 서울의 실천

공원 녹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푸른도시 선언

서울시는 2013년 4월, 공원녹지 범주에 한정됐던 공원의 개념을 도시 전체로 확장하고, 새로운 도시의 철학과 메시지를 담

아 푸른도시 개념을 재정립하는 ‘푸른도시 선언’을 발표했다. 푸른도시 선언은 공간과 하드웨어, 행정주도라는 틀에 묶여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 관점에서 공원녹지 정책의 중심을 공간에서 사람으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행정주도를 시민참여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또한 2014년 2월에는 푸른도시 선언을 구체화해 서울을 공원도시, 초록특별시로 전환하는 푸른도시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13년 3월에는 서울시 355만 가구마다 꽃·나무 심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2015년 6월에는 ‘더불어 사는 숲의 도시, 서울’을 미래상으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녹색복지를 위한 대규모 공원:

푸른수목원, 마곡중앙공원 서울식물원, 테마숲

2013년 6월, 구로구 항동 저수지 주변에 서울시 최초의 푸른수목원을 조성했다. 푸른수목원은 서울광장 8배 규모인 10만 3,354m²에 1,700여 종의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가 어우러진 서남권 대표 공원이다. 2015년 11월에는 마곡지구 중심에 서울 최초의 식물 공원으로 조성되는 마곡중앙공원 ‘서울식물원’을 착공했다. 서울식물원은 50만 3,000m²(유수지 포함 65만 7,000m²) 공간에 식물과 물을 주제로 크게 도시형 식물원과 호수공원으

로 조성된다.

2015년 3월에는 버려진 땅, 자투리 공간, 활용 가능한 빈 공간을 발굴해 소규모 숲과 정원을 만드는 1,000개의 숲, 1,000개의 정원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2015년 7월에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생애주기별 테마숲 90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태교숲(임마 뱃속)-유아숲체험장(유아기)·생태놀이터(아동기)-청소년 체험의 숲(청소년기)-치유의 숲(청·장년기)-실버숲(노년기)-녹색복지숲(전 생애)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녹색복지 정책이다. 2015년 9월에는 노후된 월드컵공원을 80개의 정원으로 재생하는 서울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도시재생을 통한 다양한 공원:

경춘선·경의선 공원, 국세청별관 및 노들섬 공원

2013년 폐선돼 사용하지 않는 경춘선과 경의선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사업인 경춘선 공원화사업을 2013년 11월 착공해 2015년 8월 지역주민들의 녹지문화공간이자 화합의 장소로 완공했다. 2015년 5월에는 덕수궁 옆에 자리한 국세청 별관을 78년 만에 철거, 일제에 훼손된 대한제국의 숨결과 세종대로 일대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근대 서울의 원풍경을 복원하는 공원화계획을 수립했다.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터미널 7 아키텍츠(Terminal 7 Architects)’의 ‘서울 연대기(Seoul Chronicle)’를

선정하고, 건축물 철거를 마무리해 복합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는 대규모 예산투입으로 갈등을 유발했던 노들섬을 시민공모 과정을 거쳐, 노들숲 치유, 노들숲길 발굴 조성 등과 연계한 복합문화기지로 2018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조선시대 군사들의 무예훈련장(예장)이 있던 곳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옛 모습을 잃은 후, 한 세기가 넘도록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던 남산 예장자락 2만 2,330m²를 원형 회복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교통난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전용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2013년 9월, 경인고속도로와 남부순환로가 만나는 양천구 신월IC에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이르는 7.53km 구간의 국회대로(제물포길)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계획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통과로 본격 추진되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여의도 등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2014년 12월에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실시했고, 2015년 10월 착공했다. 또한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금천IC까지 왕복 4차로, 총 연장 10.33km의 병렬터널로 바로 연

결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사업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5년 10월에 기공식을 개최했다. 또한 중랑천을 따라 노원구 상계와 강북구 창동에서 시작하여 성동구 성수동까지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도 계획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은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사람 중심의 쾌적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걸으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도보길, 서울두드림길(서울둘레길)

2014년 11월, 서울둘레길 8개 코스 157km 전 구간을 개통했다. 서울둘레길 개통으로 서울시 전역에 걸친 서울두드림길이 완성되었다. 서울두드림길은 서울둘레길, 한양 도성길, 근교산 자락길, 생태문화길, 한강·지천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울시 전체를 병풍처럼 둘러싼 산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서울만의 매력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곳곳에 자리한 전통 있는 사찰, 유적지 등 역사·문화자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길이 완성된 것이다.

푸른도시 선언은
산이 지키고 강이 키워온
시민들의 삶을
다양합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푸른 도시 선언



2013년 4월 푸른 도시 선언,
2014년 2월 초록특별시 서울을 위한 푸른 도시 전략계획 발표

2013년 3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전개,
2015년 6월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발표

2030



다양한 녹색복지 공원조성



2013년 6월 구로구 향동 푸른수목원 개원,
2015년 11월 마곡중앙공원(서울식물원) 착공



2015년 3월 1,000개의 숲, 1,000개의 정원 조성 발표,
2015년 7월 생애주기별 90개 테마숲 조성 발표

도시재생을 통한 공원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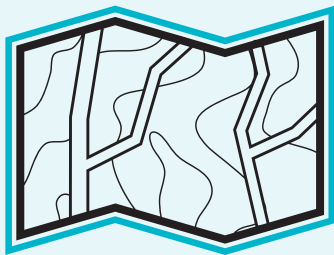


2015년 5월 국세청별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발표,
2015년 11월 노들섬 복합문화기지 조성 발표

2015년 8월 경춘선 폐철길 1단계 조성 완공,
2015년 12월 남산예장자락 공원 복원 발표



자동차전용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2013년 9월 제물포길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통과,
2015년 10월 착공
2015년 10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사업 기공식 개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예정

제 4 장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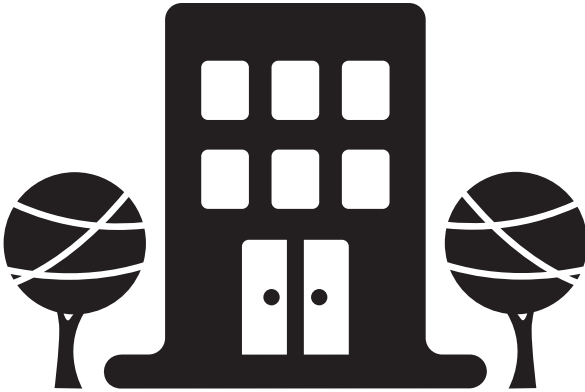
“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가난한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는 풍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를 푸는 것은,
지금 서울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잡니다.
수요자 맞춤형은
서로 다른 삶을 인정하고 ‘공존’하자는 것입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복합 개발은
도시 공간을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임차형과 리모델링은
집 주인과 세입자, 기존 주민과 새 주민이
서로 도와 상생하는 ‘공생’의 모색입니다.
희망동지의 내일은 희망입니다.
자연과 환경, 다음 세대까지 함께 품는 넉넉함은
우리 옛 마을의 오랜 지혜를 되살리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넓어집니다.

제
15
절



주택정책



‘희망둥지 서울’의 비전

민선 5기 이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큰 전기를 맞았다. 기존의 계획에 2만 호를 더해 8만 호 공급의 윤곽을 세우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패러다임과 사업방식 모든 면에서 크나 큰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의 가용 토지 고갈과 재정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엄두가 나지 않는 물량이지만, 차질 없이 모두 공급해도 주택재고의 10%가 되지 않는 물량이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해야 할 이유다.

더욱이 인구·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일률적인 유형이나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는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저성장 시대

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이제는 소득이 있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도 보다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

수요자 맞춤형은 서로 다른 삶을 인정하고 공존하자는 것이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복합 개발은 도시를 공유하려는 것이다. 임차형과 리모델링형, 민간참여형은 서로 도와 상생하는 공생의 모색이다. 자연과 환경, 다음 세대까지 함께 품는 넉넉함은 우리 옛 마을의 오랜 지혜를 되살리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가는 등 기존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도 강화할 것이다. 전 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보고 최선, 그 이상을 할 것이다.

서울 주택보급률의 현실

높아지는 주택보급률, 여전히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 103.5%이며, 서울시는 97.9%에 이르렀지만, 자가점유율은 40.2%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52.6%에서 50%로 내려갔는데, 고소득층은 반대

로 76.8%에서 77.7%로 높아졌다. 공공임대주택비율은 전국 5.5%, 서울시 6.1%에 불과한데, 전세주택은 월세주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서민주거는 여전히 불안하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 그리고 주거 빈곤의 확대

1990년대 안정화되었던 주택매매 가격과 주택전세 가격은 모두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2000년 53.3에서 2014년 98.2로 상승했고, 주택전세 가격지수는 2000년 50.9에서 2014년 97.4로 상승했다. 서울시 전체 임차가구의 47.8%가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고, 1인 청년가구의 36.3%가 지하방이나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다.

공생도시를 위한 서울의 실천

집 걱정 없는 서울,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을 위한 희망등지 프로젝트

2012년 5월, 기존 6만 호에 2만 호를 추가한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을 위해 희망등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8만 1,624

호를 공급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2014년 3월에는 새로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 12월 새로운 8만 호 공급을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가용 토지 고갈과 재정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물량이지만 시유지 등 자투리땅 활용, 서울형 리츠 등 새로운 민관협력형 사업 모델 개발과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공공기숙사, 의료안심주택, 공공원룸주택, 여성안심주택, 쪽방리모델링, 공동체주택, 협동조합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진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2012년 1월, 대학생들이 주거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유스하우징 사업을 보완한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새롭게 진화하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2012년 2월 전전세 방식의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 6월 쪽방촌 리모델링, 7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9월 공공기숙사 공급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2013년 1월 새로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종합판인 임대주택 8만 호+α 계획을 발표했고, 2014년 2월 전국 최초의 의료안심주택, 4월 전국 최초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도전숙, 10

월 첫 여성안심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 1월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주택의 공급기반을 탄탄히 하였고, 4월에는 보증금지원형과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활성화방안, 7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모델의 발원지이자 테스트베드,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새로운 민관협력 임대주택 사업모델, 서울리츠

2015년 7월,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을 활용하고,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리츠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민관협력 임대주택 사업모델, 서울리츠를 개발해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전세값 상승, 월세전환 가속화 등 주거비 부담으로 가장 고통받는 세대인 2030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SH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의 투자를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평균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이다. 2030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인 서울리츠는 2018년까지 2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 시작으로 은평뉴타운 부지를 서

울리츠 1호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주거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거관리 공공혁신방안

2015년 6월, 서울시민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집합 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등 대표적인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혁신방안을 담은 주거관리 공공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 관리 분야는 관리주체 역할 재정립, 새로운 관리기법,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온라인투표 확대, 커뮤니티 예산편성 의무화 및 코디네이터 운영, 공동주택 박람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정식조직화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집합건물 관리 분야는 공공개입 근거 마련을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통합정보마당 구축,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오피스텔 및 원룸 등 관리기준 마련, 이동상담실 및 시민아카데미 운영, 민·관 합동 실태점검 상설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혁신방안을 담고 있다. 정비사업 관리 분야는 휴면조합 지정, 공사·용역 전자 입찰제,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 중요회의 시 공공변호사 참여, 조합운영 실태점검 내실화, 조합임원 선거관리규정 시행, 사업 추진주체 역량 강화 등의 혁신방안을 담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주거안정대책

2012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실태분석과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주거복지단체를 활용해 권역별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조정과 주거세입자의 전월세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전월세 자금의 대출지원을 앞선하는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 8월 개소 이후 2015년 10월까지 총 14만 4,000건의 상담을 진행했는데, 특히 이사날짜를 정해 놓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 어려운 세입자를 위한 단기적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은 세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3분기부터 주택의 월세 계약이 증가하는 부동산 추세를 반영해 실거래 자료에 기반한 전월세전환율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매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의 공개는 새로 집을 구하거나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불공정한 월세 부담과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연과 환경,
다음 세대까지 함께 품는 넉넉함은
우리 옛 마을의 오랜 지혜를
되살리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넓어집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80,000 + 80,000

2012년 5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발표, 2014년 3월 임대주택 추가 8만 호 공급 발표
민선 5기 공급목표 달성 8만 1,624호 공급, 추가 8만 호 차질 없는 공급 추진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공공기숙사, 의료안심, 공동체주택 등

2013년 1월 임대주택 8만 호 + α 계획 발표,
2015년 1월 공공주택 공급조례 제정

80,000 + 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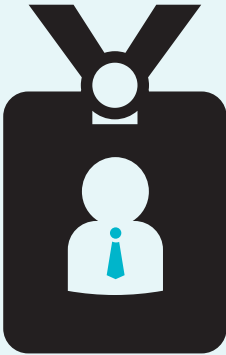
서울리츠 임대주택 공급

2015년 7월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결합한 민관협력 임대주택 사업모델, 서울형 리츠 발표
 2016년 7월 제1호 시범사업으로 은평뉴타운 서울형 리츠 착공 예정 등
 2018년까지 2만 호 공급 추진

20,000



취약계층과 서민주거안정



2012년 권역별 주거복지지원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2013년 전월세전환율 공개

2015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개선,
 2015년 주거관리 혁신방안 발표



“내 입에 밥 들어갈 때
다른 사람 입에도 숟가락 들어가는지 살피라.”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도,
어머니께서는 늘 주변에 배굶는 이들이 없는지,
혹시라도 맘 편히 밥 먹지 못 하는 이들이 있을까 봐
늘 살피고 돌보셨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가르침이 제게 무상급식을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고 나서 제 다음 고민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급식을 먹이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투자입니다.

제
16
절



교육정책



‘교육복지도시 서울’의 비전

정부 여당과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과정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3년 1월에는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보육 사업처럼 전국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또한 대선공약으로 “초·중 무상교육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육재정을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을 개정함으로써 보육대란은 2013년부터 지속되고 있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국가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교육은 학교를 넘어서 지역과 마을과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이 현장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래야 사교육을 방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 대학생들의 꿈과 미래, 사랑을 되찾아 주어야 할 때다.

서울의 교육복지 현실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안전책임제 실현, 현실은?

2012년 12월 대선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3년 1월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보육 사업처럼 전국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했으나 재정은 대부분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초·중·고 무상교육과 대학교 반값등록금 약속, 현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초·중 무상교육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학교급식이나 교복구입비 등은 제외되고 있다. 대학의 반값등록금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실현되었다고는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교육복지를 위한 서울의 실천

학생들의 건강까지 생각한 친환경 무상급식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27일, 보궐선거 이후 첫 업무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 19만 8,000명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서류에 결재했다. 2012년에는 공립 초등학교생은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총 59만 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며,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에는 초·중학교 전체 총 78만 6,000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들에게는 희망의 밥상,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급식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함께 키우는 아이들의 희망과 미래, 무상보육

2013년 9월, 아이들의 희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무상보육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자치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었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 선거공약을 통해 아이 키우는 비용은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해 보육재정을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2016년 보육대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보육 사업처럼 전국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 사랑을 키우는 반값등록금

2012년, 국가적인 인재양성과 과도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의 실질적인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었다.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으

로 한 학기 등록금을 2011년 222만 8,000원에서 111만 4,000원으로 낮추었다.

학생들도 더욱 막중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사회공헌 선언식을 갖고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관리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했다.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 꿈 프로젝트

2014년 10월, 가고 싶은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 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7개교 26개 동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5년 2월 완료했다. 2015년 상반기에는 교육청과 협력으로 50개교 150개 동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했고, 2015년 11월에는 첫 민관협력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2018년까지 전체 초·중·고의 절반인 675개 학교, 1,350동의 화장실을 학생들이 가고 싶은 화장실로 개선하여, 감성적이고 창조적 사고가 가능한 공간, 스스로를 가다듬는 일상의 쉼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이 학교다, 교육복지도시 서울

2014년 3월, 학부모, 교육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시민 누구나 학교 밖의 온 마을을 학습공간으로 하여,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복지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교육문제를 서울시와 자치구 시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함이다. 2014년 11월에는 교육복지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벽을 허무는 전국 최초의 거버넌스 모델인 글로벌 교육 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선언하고, 4개 분야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균형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는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사업

2014년 3월, 자치구 및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사업을 발표했다. 교육우선지구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키워 자립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교육비의 절감뿐만 아니라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4년 11개 자치구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에는 서울형 교육우선사

업지구의 성과를 평가하는 서울혁신교육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민의 힘과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시민평생교육

2013년 4월 ‘즐거운 평생학습, 나를 깨우고 세상을 바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자기 주도적 삶을 통해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민주 시민상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평생학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4월에는 평생교육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하는 한편, 2015년 7월에는 5개 대학과 ‘대학 연계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어 2017년까지 25개 대학으로 확대·운영하고, 향후 시민대학 운영을 토대로 비학위 평생교육체계인 ‘개방형 자유시민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의 힘과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안전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급식을 먹이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투자입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친환경 무상급식



2011년 10월 27일
취입 후 무상급식 전면 실시
(5~6학년 무상급식 비용지원 결재) 첫 결재



2012년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 2014년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확대 실시



반값 등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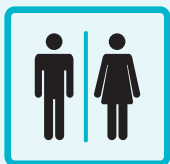
2012년 서울시립대학교 실제 등록금 영수증에 반값이 찍히는 반값등록금 전면 실시
2013년 12월 자율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관리 활성화 계획 발표



함께 꿈 프로젝트

2014년 10월~2015년 2월 7개교 26개 동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시범사업 완료
2015년 4월 2018년까지 675개교 1,350동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1,350



교육복지도시 서울 선언



2014년 3월 교육복지도시 서울 기본계획 및
3개 분야 14개 과제 81개 사업 수립 발표

2014년 3월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사업 발표,
2014년 11월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 선포



서울시 미래유산 프로젝트는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초고속 성장 도시인 서울은 수많은 근현대 역사문화 유산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파괴되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은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비록 현재는 문화재로 보호받지 못 하고 있으나
50년, 100년 후에는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찾아내
더 늦기 전에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20세기 서울의 모습을 잘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달함으로써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단절 없이 이어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
17
절



문화정책



‘문화예술도시 서울’의 비전

초고속 성장 도시인 서울은 수많은 근현대 역사문화 유산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파괴되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은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소실되고 있다. 비록 현재는 문화재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나, 50년, 100년 후에는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찾아내 보존해야 한다.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20세기 서울의 모습을 잘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달함으로써,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단절 없이 이어지고, 시민들의 문화공간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이 가진 정체성은 2,000년 도시 서울이 가진 자연, 역사, 문화, 예술이다.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높게 솟아오른 첨단 건축물의 마천루가 아니다. 한성백제 500년으로부터 한양조선 500년의 역사에 이르는 2,000년 도시 서울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되살리는 정책, 그것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욕구가 변화함에 따라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도 함께 요구된다. 시민들은 도시생활을 통해 받은 상처와 외로움을 치유받고자 하며, 문화를 통해 참여와 소통,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제 서울은 문화로 숨 쉬는 생명도시가 되어야 하며,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든지 서울을 즐기고, 서울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화예술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의 문화 현실

**역사문화유산 발굴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비전 부재**

우리나라 GDP는 13위권(2014년 IMF)이나, 국가브랜드는 27위 수준(2014년 GfK 지수)이며, 서울브랜드지수 또한 30위권 수준

(안홀트-GMI지수)에 머물고 있다. 시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브랜드가 저평가 상태다. 역사문화 보존을 넘어 현대적 가치가 있는 시민의 자산으로 역사유산 가치의 정립을 통해 서울의 역사를 2,000년 역사도시로 확립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여가시간은 확대되고 있으나, 소극적인 여가활동과 편중된 문화향유

우리나라 국민의 개별여가활동은 1위 TV(51.4%), 2위 인터넷(11.5%), 3위 산책(4.5%)으로 나타나고, 문화예술 관람률은 1위 영화(65.8%), 2위 대중음악·연예(14.4%)로 조사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악, 공예, 클래식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문화향유자를 넘어 창조자로서의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참여기반 제공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서울의 실천

2,000년 도시 서울의 역사, 한양도성 및 한성백제 세계문화유산 등재

2012년 5월,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성곽 복원 및 형상화 등으로 전 구간을 연결하고,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2014년 11월 한양도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12년 4월에는 한성백제박물관을 개관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백제 후기 시대의 공주·부여·익산 지역 8곳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되면서 백제 초기 시대의 유적인 서울지역의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과 방이동 고분군 등은 기존의 백제세계문화유산 등재구역에 추가하는 확장등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의 100년 보물을 준비하는 미래유산 프로젝트

2012년 6월, 서울의 100년 보물을 준비하는 미래유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유산 프로젝트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생활사적으로 가치가 있어,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근현대 유산을 지정해 보존하는 사업이다. 서울 미래유산은 각종 개발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서울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근현대 유산이 제대로 평가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에 전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해 2,000년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자긍심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관광 자원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13년 281개, 2014년 53개, 2015년 44개 등 총 378개의 서울 미래유산이 지정되었다.

창조경제의 핵심 거점, 5대 문화공연시설 건립

서울시는 2015년 2월, 문화예술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5대 문화공연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5대 문화공연시설은 고품격 클래식 문화 대중화를 위한 서울시향 클래식콘서트홀, 생활 공예 및 공예산업의 기반이 될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국악 활성화의 앵커기능을 담당할 국악예술당 및 국악기·민요박물관, 독립·예술 영화 등 다양한 영화상영 및 시민·영화인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서울시네마테크, 국내 최초 아레나급(2만 석 규모) 복합대중문화공연시설인 서울아레나 등이다. 공예문화박물관과 국악예술당은 건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들은 입지선정 및 건립방향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민의 문화향유를 높이는 권역별 복합문화시설 건립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적극적인 여가활동 지원과 편중

된 문화향유를 해소하기 위해, 손에 닿는 문화예술을 위한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창조적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2015년 4월 폐시설인 구의취수장을 활용해 문화 창작공간인 서울거리예술센터를 개관했고, 신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신촌 문화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편중된 문화시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가재울뉴타운, 미아뉴타운, 길음뉴타운, 종로구 평창동, 강서구 내발산동, 영등포 방림방적부지 등 권역별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책 읽는 도시 서울, 시민 곁으로 찾아 가는 다양한 도서관 확충

2012년 7월, 책 읽는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10월 옛 서울시청에 서울지역 거점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을 개관해 2015년 7월 10만 번째 회원이 가입했다.

2015년 7월에 서울시의 첫 어린이 전문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했고,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취임 이후 매년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165개소의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도서

관, 여행하는 도서관, 한 평 시민 책 시장, 헌책방거리 활성화, 북 페스티벌 등 다양한 시민참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서울을 만드는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2012년 10월,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20 체육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2013년 7월부터는 국내 최초 민·관 협력 생활체육 캠페인인 ‘서울아, 운동하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015년 11월, 서울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구단인 히어로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국내 최초의 돐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을 개장했고, 서울시민 생활체육 대회,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생활체육의 서울시민 리그인 S-리그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39개소, 2015년 33개소 등 2018년까지 생활권 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261개소 확충을 추진 중에 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20세기 서울의 모습을 잘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달함으로써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단절 없이 이어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012년 5월 한양도성 종합계획 발표,
2014년 11월
한양도성 세계유산 우선등재 대상 선정



2012년 4월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2015년 12월
풍납토성 핵심지역 조기보상 계획 발표



5대 문화공연시설 건립



2015년 2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5대 문화공연시설 건립계획 발표(기자간담회)





책 읽는 서울, 도서관 확충



2012년 7월

책 읽는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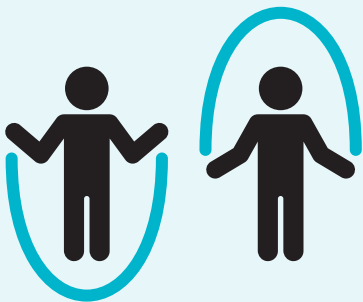
2012년 10월

서울도서관 개관,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19개 확충(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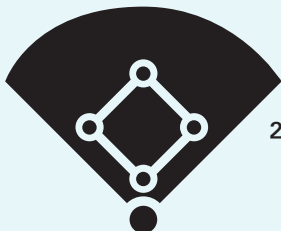
19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2012년 10월 체육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2013년 7월 서울아 운동하자 캠페인 추진



261

2015년 11월 최초 돔구장 고척스카이돔 개장,
2018년까지 생활체육시설 261개소 확충



‘원전하나줄이기’는 가치와 정책의 명백한 전환입니다.
그간의 서울이 에너지 절약 도시에 머물렀다면
이제 서울은 에너지 생산 도시로 갑니다.
이것은 시민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이자
우리의 시대정신을
상생과 공생을 위한 방향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2014년까지의 ‘원전하나줄이기’는
이 모든 시대적 상황에 대비하는 서울시 행정의 시작입니다.
전력 자급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해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투자인 것입니다.



환경정책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 비전

2011년 여름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서울을 강타했다. 한 시간에 113mm로 쏟아진 폭우로 서울 곳곳이 물에 잠겼으며, 산이 무너져 시민들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 이상기후 현상과 비극의 배후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 있었다.

1,000만 서울시민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1,700만 TOE에 달하는데 서울의 전력 수요 자급률은 2.8%에 불과하다. 이는 에너지 정의에도 어긋나고, 에너지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도 전체 에너지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러나 서울의 에너지소비량과 전력소비량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4월 시작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가치와 정책의 명백한 전환이다. 그간 서울이 에너지 절약 도시에 머물렀다면, 이제 서울은 에너지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확고히 하고, 에너지 정의를 추구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립과 나눔, 참여의 가치를 높이고, 타 지역과 협력하고,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여 2020년까지 전력 자립률 20%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것은 시민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이자, 우리의 시대정신을 상생과 공생을 위한 방향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선진 환경도시에 비해 뒤늦기는 했지만, 서울시는 에너지 전환 도시로의 거대한 U-Turn을 시작한 것이다.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 소비도시가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 도시를 향하고 있다. 세계 기후환경 수도를 향하여 대망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것이 원전하나줄이기의 희망 비전이기도 하고, 모든 시대적 상황에 대비하는 서울시 행정의 시작이기도 하다. 전력 자급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투자인 것이다.

에너지 소비 현실

세계적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기후변화

세계의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간 0.74℃, 해수면은 매년 1.8mm 상승(IPCC, 2007)했으나, 우리나라 6대 도시 평균기온은 1.7℃ 상승, 강수량은 19% 증가했고, 최근 43년간 제주 해수면은 22cm, 매년 5.1mm씩 상승하고 있다. 21세기말 평균기온 4℃, 강수량 17%, 평균해수면 69cm(세계 59cm)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의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와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원자력 발전 비중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꾸준히 증가해 2035년 에너지수요는 25,400만 TOE로 2011년(20,500만 TOE)보다 연평균 0.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6~97%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존 23기와 건설 예정인 11기를 빼고 추가로 7기의 원전을 더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 생산도시를 위한 서울의 실천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의 전환, 원전하나줄이기

2012년 4월,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4년까지 에너지 200만 TOE 절감해 원전 1기 분량의 수요를 대체하여, 2.8% 수준의 전력자급률을 2014년 8%, 2020년 20%까지 높이는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다. 서울시는 2014년 200만 TOE 이상을 절감해 목표를 달성했고, 민선 6기에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해 서울시 총 전력소비량을 2010년 47,295GWh에서 2014년 45,019GWh로 4년간 4.8%를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전년 대비 1.3%)과 2014년(전년 대비 3.3%) 2년 연속 전력소비량을 감축했는데, 이는 전국 전력 사용량이 0.6% 증가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성고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4년 감소량 1,536GWh은 약 42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

량의 규모로, 양천구의 한 해 전력 소비량 1,506GWh 보다 많은 양이어서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제는 햇빛이다, 햇빛도시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6월, 서울시·교육청·(사)서울햇빛발전소 간 시민햇빛발전소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햇빛도시 출범식을 개최했다. 2012년 8월에는 한화솔라에너지와 태양광 공동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을 체결했다. 한화에서는 2014년까지 서울지역에 태양광 100MW 설치를 위해 약 3,000억 원을 투자하여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서울시는 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2015년 7월에는 태양광발전소 건설비 82억 5,000만 원 전액을 시민 공모펀드로 조성하는 제1호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를 성공적으로 판매했다.

2013년 5월에는 서울형 발전차액 제도를 통해 짧은 일조시간과 높은 임대료 및 공사비, 인증서 판로 등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 햇빛발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따라 2004년 3가구에 불과했던 태양광주택은 2014년까지 10년간 총 3,552가구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을 시작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2,369가구로 전체 주택태양광 가구 수 중에 66.7%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세계 최고의 재활용 자원순환도시 서울

서울시는 2013년 5월, 주택가 재활용 분리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대형유통센터, 학교 등과 다각도로 협력하는 한편,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를 거점 배치하는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시범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Zero waste, Seoul 2030’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12월에는 악취, 침출수 등 환경오염과 매립지 주변 주민 고통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민 스스로 생활방식을 바꾸어, 쓰레기를 줄이고, 처리기반을 혁신해 2017년까지 직매립을 없애기 위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선언을 했다.

2012년 9월에는 재활용 특화단지인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 3월 도시계획시설(재활용시설) 결정(안) 및 구체적인 설계와 인허가 기간을 거쳐 2015년 4월 착공했다. 서울시는 2017년 장안평 일대를 서울재사용플라자(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를 중심으로 중고차 매매시장, 중랑물재생센터, 하수도박물관 및 공원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의

재활용·재사용·업사이클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서울재사용플라자 기공식을 계기로 자원순환도시 서울 비전 2030을 발표했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이클레이 서울선언과 국제적 노력

2014년 4월, 왕안순 베이징시장과 서울과 베이징 양 도시의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공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약속인 대기질 개선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통합위원회 내에 실무협력 전담조직인 환경팀을 신설해 구체적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 4월에는 세계 최대 도시네트워크인 이클레이(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시장은 1,200개 회원도시의 합의를 이끌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인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2015년 12월에는 세계도시 정상들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지방정부 기후정상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주최의 액션데이(Action Day)에 참석했다.

파리 당사국 총회는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될 신기후변화체제(New Climate Regime)를 수립하고,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원순 시장은 유엔기후 변화협약 주최 액션데이 패널토론에 참여해 원전하나줄이기 등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이클레이 최고 의결기구인 세계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의를 주재하고, 도시의 기후변화대응 의지를 표명한 이클레이 선언문을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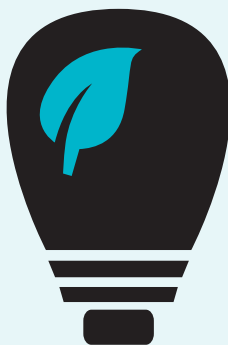
핵심사업 주요성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2012년 4월 에너지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45,019_{G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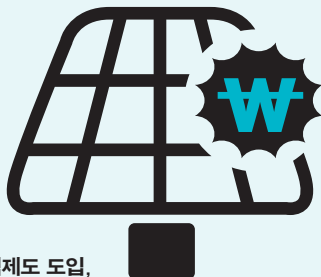
서울시 총 전력소비량 4.8% 감소 (2010년 47,295GWh → 2014년 45,019GWh)



햇빛발전도시 서울



2012년 6월 햇빛도시 출범식 및 시민햇빛발전소 추진,
2012년 8월 민관협력 태양광발전 협력



2013년 5월 서울형 발전차액제도 도입,
2015년 8월 태양광 시민펀드 판매 개시



자원순환도시 서울



2013년 5월
Zero waste, Seoul 2030 계획 발표,
2014년 12월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선언

2015년 4월 서울재사용플라자 착공 및
자원순환도시 서울비전 2030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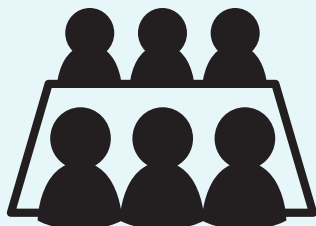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ICLED)



2015년 4월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ICLED) 개최,
서울선언문 채택



2015년 12월 파리 지방정부 기후정상회의 참석,
서울시 성과발표 및 이클레이 선언문 채택



통일과 평화, 공동 번영은
모두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나아가 민족적 · 시대적 당위입니다.
어떤 정치적 · 경제적 이해관계도 이를 희석할 수는 없습니다.
냉전과 파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교류를 통해 서울시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안정을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뜻,
용기와 신념이 한데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의 물줄기가
공동 번영과 남북 평화의 길로 흐를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
19
절



남북교류



남북 평화를 위한 서울의 비전

지금의 남북관계는 다시금 옛날의 냉전 대결구도로 회귀했다. 철도와 도로는 막혔고 금강산 관광과 같은 인적교류도 중단되었다.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국민들과 장병들이 희생을 치렀다. 1988년 이후 국가전산망 등록된 13만 명의 이산가족 중 6만 3,000명의 이산가족들이 짧은 만남조차 하지 못한 채 이 세상과 이별했다.

경평축구와 서울-평양 시향의 상호방문공연 등 서울과 평양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신뢰의 토대가 굳건해지면 평화와 통일은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통일과 평화, 공동 번영

은 모두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나아가 민족적·시대적 당위다. 어떤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도 이를 희석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가 다른 경쟁국가의 기업 가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한다. 이에 대한 주요한 원인은 남북 갈등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곧 서울 디스카운트다. 서울이 지닌 대표성과 지정학적 위치는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문화 교류와, 대북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평화를 여는 데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경평추구와 서울시향 평양공연과 같은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한 화해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은 정부가 도와줘야 가능하고, 또 함께해야 한다.

이제 평화통일은 민족적 역사적 당위성은 물론이고, 이를 뛰어넘는 미래전략이어야 한다. 위대한 꿈의 출발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첫걸음이 평양시와 서울시와의 교류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남북관계의 현실

냉전 대결구도로 회귀된 악화되는 남북관계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추진과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업그레이드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2015년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었을 뿐, 남북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체된 남북 간 경제협력, 침체된 개성공단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추진되고,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정착된 개성공단은, 2010년 9월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2년 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결국 개성공단마저 완전 철수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협력에 있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남북교류를 위한 서울의 실천

남북 간 공존과 평화를 위한 실천적 고민, 문화·체육 남북교류 추진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2월, 이회호 여사를 방문하여 서울시는 남북관계가 잘 이뤄진다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서울·평양 간 경평축구를 다시 개최하고, 서울·평양 교향악단의 상호교환공연 등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이후, 2012년 1월 신년사를 통해 경평축구 및 서울시향 평양공연을 제안했다.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6·15 공동선언 및 10·4 공동선언 기념식 참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같은 제안을 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통일부장관 등 면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정부 고위관계자를 통해 중앙정부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2015년 초 인천시는 중국 청두에서 북한 평양시 연고팀인 4.25축구단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인천-평양 친선대회를 개최했고, 2015년 8월에는 경기도 유소년 선발팀과 강원도 유소년 선발팀이 평양에서 열린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참가했다. 특히 2015년 10월 평양에서는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되었고, 축구대표단의 귀국 기자회견에서 2016년 상반기

기에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은 1946년 경평축구가 중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로 경평축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사업 추진

서울시는 2015년 12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통일부에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체에 포함하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2015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예산은 2014년 49억 2,000만 원보다 증가한 5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경평축구전과 서울시향 평양공연, 동북아 장애인 탁구대회, 문화재보존 학술대회 등 사회·문화교류 사업에 1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서울·평양 간 도시계획 협력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2억 원을 배정했으며, 산림 조성과 수질 개선, 평양 중앙연구소에 의약품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사업에 24억 원을 배정했다.

또한 서울시 공단 설립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개성공단

근로자 재활용 자전거 지원 사업 등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광복과 분단 70년 관련 행사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통일교육에 7,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 간 공동사업 발굴도 건의하여 경기·강원 등 접경지역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사업도 연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과 평양이 가진 역사도시로서의 면모를 고려해 평양 유적을 복원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방법, 평양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 도시계획 경험 교류 등을 공동 연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남북교류 사업이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평양 간 경제협력의 기반, 남포공단 내 서울공단 추진

2015년 6월, 지방정부의 실용적 교류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열쇠로 서울~평양 간 경제적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남포공단에 서울공단 설립의사를 밝혔다. 남포공단은 개성공단과 가까워 국내 중소기업들이 제2개성공단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곳이고, 1997년부터 당시 대우그룹이 3년간 공단운동을 하다가 철수한 적이 있다. 북한 내 공단 설립은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남북관계를 잘 끌어가면 협소한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긴장 완화와 한계에 도달한 경공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1세기는 도시외교의 시대이고, 독일 통일의 사례가 말해주듯 구체적 콘텐츠를 통한 실용적 교류가 필요하다. 개성공단을 모델로 남포공단 내 서울공단을 설치해 서울~평양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2012년 8월, 서울시 최초의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소득 2만 4,000달러,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과정에, 36년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민주화 운동까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국가유공자들이 있었지만, 빛나는 공적에 비해 현실적인 대우와 예우는 소극적이었다.

서울시는 2012년 이후 발표한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애국지사 보훈예우수당 지급, 애국지사의 집 문패달기, 보훈가족 주택특별공급 등 주거안정 지원, 독립유공자 지정병원 확대, 보훈가족 일자리 창출,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건립, 서울시 보훈회관 설립, 서울시 보훈

기금 운용, 보훈단체 각종 활동 및 사업 지원 확대 등 서울시내 12만 명의 보훈가족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보훈서비스 제공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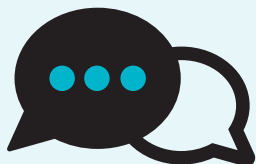
문화·체육 남북교류 추진



2012년 1월 신년사를 통해
경평축구 및 서울시향 평양공연 제안



6·15



10·4

2012년 이후 6·15 공동선언 및 10·4 공동선언 기념식 참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



2012년 2월 통일부장관 면담 등
정부 고위관계자를 통한 지속적인 대정부 협조요청

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 추진

2015년 6월
남북 간 신뢰회복과 경제협력을 위한
남포공단 내 서울공단 설립의사 발표





2016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예산 55억 원 편성
(2014년 49억 2,0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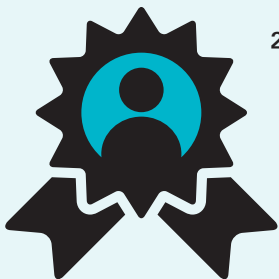
5,500,000,000

경평축구, 서울시향 평양공연, 동북아 장애인탁구대회, 문화재보존 학술대회 등
남북 사회·문화교류사업 18억 원 배정,
시도지사협의회 산하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1,8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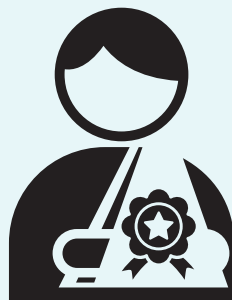


서울시 보훈종합대책



2012년 8월 서울시 최초의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발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건립,
서울시 보훈회관 설립 등 추진



혁 신

제
5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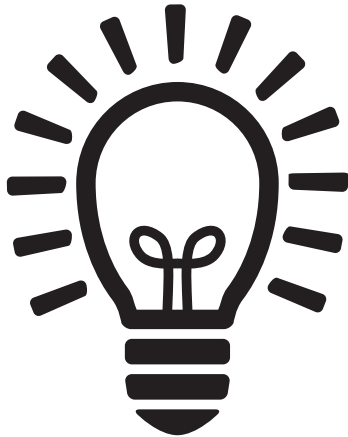
“

변화의
시작은
소통입니다

”

서울시가 시민 여러분의 힘이 되고,
시민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려면
우리는 혁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만들고,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서울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사회 전반, 곳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혁신의 기본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완성할 것입니다.

제
20
절



사회혁신



‘혁신도시 서울’의 비전

일반적 의미에서 사회혁신은 사회적 문제와 수요에 대한 창의적이고 유용한 해결책으로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성과 정당성을 담보로 하고, 사회혁신의 결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형 프로젝트처럼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기 때문이다. 심야버스(올빼미 버스), 보도블록 10계명, 여성안심택배, 우리동네 보육반장, 환자안심병원, 자투리 주차장, 층간소음 분쟁해결 등 일상생활에서 매일 부딪히

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들이 바로 작은 혁신이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 실행해야 수십만, 수백만의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만든 작지만 큰 변화들은 커다란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서울시가 시민에게 힘이 되고, 시민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새로운 삶을 만들고,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한다. 서울의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회 전반,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의 기본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더욱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혁신들을 완성해야 한다.

사회혁신의 현실

**높아지는 공공정보 수요,
하지만 낮은 원문정보 공개율**

2010년을 전후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정보의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식하여, 거버먼트 2.0 운동과 다양한 개방, 공유, 참여, 활용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14년부터 정보공개 3.0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나, 2015년 7월 원문정보 공개율은 47.6%에 그치고 있고, 중앙부처는 34.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다 다양해지고 심화하는 세계적 위기, 높아지는 사회혁신의 요구

노령화, 저출산, 기후변화, 불평등 심화, 만성병 증가, 기술 변화, 지구화와 지역화, 에너지, 식량 등 21세기 들어 다양하고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혁신, 정부혁신, 기업혁신, 시민혁신 등 모든 사회분야에서 혁신의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반목과 갈등, 대립과 투쟁의 비정상적 사회현실만이 난무하고 있다.

사회혁신을 위한 서울의 실천

열린 시정 2.0 정책선언, 정보소통광장

2011년 11월, 보궐선거 공약을 통해 열린 시정 2.0을 선언했다. 2013년 10월 정보소통광장의 본격적인 오픈과 동시에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생산된 다음날 원문 그대로 공개했으며, 2014

년 3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을 모두 공개했다.

2014년 10월 5개 자치구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전면공개, 2015년 3월 건설알림이와 연계한 서울건설정보 결재문서 공개, 내 손안에 서울과 연계한 기사, 사진, 영상 등 시민이 올린 다양한 콘텐츠 제공, 2015년 3월 모든 자치구 결재문서 공개, 2015년 10월 17개 투자출연기관 결재문서 공개를 실시했다. 또한 2012년 2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기록원 건립을 추진해 2015년 착공했으며 2017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정보소통 광장 개설 이후 정보공개율은 2011년 89.9%에서 2014년에는 96.2%로 상승했고, 정보공개 건수는 총 449만 8,941건, 총 방문자수는 155만 1,058명, 전체 열람문서는 824만 9,513건을 기록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파크의 거점, 서울혁신파크

2013년 5월, 은평구 녹번동 (구)질병관리본부 부지 10만 9,000m²에 서울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 및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 시작으로 서울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청년허브,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과

크레이티브랩, 칼폴라니연구소 등이 차례로 입주해 다양한 혁신 실험들을 펼치고 있다. 서울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울혁신파크의 시작을 본격화하기 위해 서울혁신센터가 2015년 4월 문을 열었다.

혁신파크에 입주해 활동할 1,000명의 혁신가를 모집하는 전 대미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6월 말에는 혁신파크 개소식을 진행했고, 서울혁신파크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혁신국제회의(2013), 사회혁신포럼(2014), 사회혁신엑스포(2015) 등 다양한 국제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2020년까지는 서울혁신파크를 세계적 혁신센터로의 위상 정립을 위해 국내·외 앵커시설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상호 경험을 공유·협력하는 상생과 협업의 열린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사람 사는 것 같은, 살맛 나는, 사는 재미가 있는 서울, 마을공동체

2012년 3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사람 사는 것 같은, 살맛 나는, 그래서 사는 재미가 있는 서울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뉴타운 출구전략이나 대안사업이 아니라 주거는 물론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종합적인 범위를 다루는 사업으로, 지난 몇

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경쟁의 가속화, 불균형 성장, 개발 위주의 정책들로 인해 피폐해진 시민 삶을 치유하고, 잊혀져간 사람 간의 관계망을 복원해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사업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2년 9월에는 마을공동체 관련 국내 최초의 종합계획인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2012년 이후 매년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한 서울마을박람회, 우수마을사례발표회,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 시민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15년 9월에는 ‘2015 서울마을박람회’와 더불어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동시에 개최하였으며, 서울의 19개 자치구와 충남 아산시 등 30여 개 지방자치단체 등 49개 지방정부가 동참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하였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투자기금과 사회혁신채권

박원순 시장은 2012년 4월, 취임 이후 관련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원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기금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2012년 7월에는 사회투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국내 최초로 제정했다. 사회투자기금은 자금의 선순환, 공정한 평가, 투명한 자금 운용을 기반으로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사회적 프로젝트 융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사회성과 보상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80여억 원을 조성하여 89개 사업에 약 160여억 원을 투자 및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투자기금의 내실화 및 안정화, 사회적 과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융자 활성화 등 전략업종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융자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 4월에는 선 사업추진, 후 예산반영의 성과기반 방식인 사회혁신채권 도입을 발표하고, 사회투자기금의 투자를 통해 2014년 1월 어르신자살예방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한 바 있다. 2014년 3월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2015년 6월 우리나라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장애아동 교육 사업을 제1호 사업으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혁신의 기본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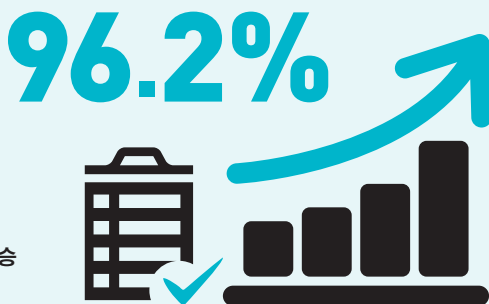
핵심사업 주요성과



정보소통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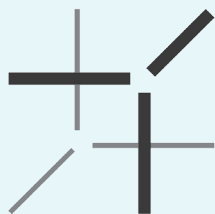
2012년 8월 열린 시정 2.0 정책선언



2013년 10월 정보소통광장 본격 오픈,
정보공개율
2011년 89.9% → 2014년 96.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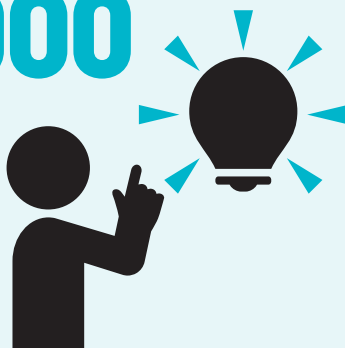
서울혁신파크



2013년 5월 서울혁신파크 조성 계획 발표,
2014년 5월 서울혁신파크 설치·운영 조례 제정

1,000

2015년 5월
서울혁신센터 개소 및 1,000명의 혁신가 모집,
2020년까지 세계적 혁신파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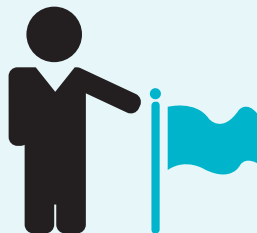
마을공동체



2012년 3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공포,
2012년 9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



2012년 9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발표,
2015년 9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사회투자기금(SIF)과 사회혁신채권(SIB)



2012년 4월 사회투자기금 추진계획 방침 수립,
2012년 7월 사회투자기금 설치 조례 제정



2013년 4월 국내 최초 사회혁신채권 도입 발표,
2014년 3월 사회성과 보상사업 조례 제정



저의 2기가 시작되면서
사회혁신이나 민간혁신이 되려면 우선
공공혁신부터 제대로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법령으로 제정할 권한은 없지만
서울시의 권한 범위 내에서 먼저 모델을 보이면,
이런 압력 때문에 아마 국회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미 하고 있다면
국회가 계속 보류해 있을 수가 없고,
서울시가 한 것들을
다른 지방정부도 따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만간 더 많은 곳에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
21
절



공공혁신



‘사람특별시 서울’의 비전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26위였다. 사법부 신뢰도는 2013년 기준 27%로 42개국 가운데 39위였다. 사회 혁신이나 민간 혁신이 되려면 우선 공공 혁신부터 제대로 되어야 한다. 김영란법을 서울시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박원순법이다.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면 그 압력 때문에 국회가 안할 수가 없을 것이고, 먼저 하고 있다면 계속 보류하고 있을 수가 없고, 서울시가 한 것들이 다른 지방정부도 따라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법령이나 제도가 있어도 사람이

그걸 이해하고 따라하지 않으면 장식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제도와 인식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민선 6기 서울시는 행정적 편의와 효율을 위해 사람을 도의 시하던 시정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실용적인 행정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우리 사회의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청렴에 있어서만 큰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갑을 간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서울,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 사람특별시 서울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혁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등 전체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 가능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행태 및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것이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같이 하여 시민이 진정으로 체감하고, 시민 곁으로 한층 더 다가가도록 거듭나야 한다.

부정부패 현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국회는 통과했지만 위헌 소송 진행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논란만 지속되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를 겨우 통과했다. 하지만 과잉입법, 언론 자유 침해, 자의적인 법집행 등의 비판 속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심리가 진행 중이다.

끊을 수 없는 부패, 끊이지 않는 부패, 총체적 부패공화국

독일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CPI)는 한국은 조사대상 175개국 중 2010년에 39위, 2011년 43위, 2012년 45위, 2013년 46위, 2014년 43위로서 5년째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한 홍콩의 정치경제리스크컨설팅사(PERC)의 2015 아시아·태평양 국가 부패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17개국 중 8위, 2014년 16개국 중 9위를 차지했다.

청렴도시를 위한 서울의 실천

단 돈 1,000원이라도 금품 수수하면 처벌, 박원순법

2014년 8월, 금품수수 방지, 부정청탁 방지, 이해충돌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김영란법을 더욱 강화한 혁신대책이다.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여부나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하고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2015년 11월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전과 비교해 공무원 주요비리 발생건수가 39%(71건→43건) 줄었고, 시민 51.2%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공무원 93%가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5년 12월에는 고위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를 의무화하고, 심사 대상을 현재 3급 이상에서 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박원순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시민을 향한 갑(甲)옷 벗기, 갑을관계 혁신대책

박원순 시장은 2014년 8월,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과 지위남용

을 막기 위한 갑옷 벗기,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일반 시민 민원인에 대한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 및 여러 부서 방문과 개별 서류 접수, 민간 위탁단체 등에 대한 동일 자료 반복요구,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서울시 업무 떠넘기기, 권위적 태도와 막말, 일방적 업무지시와 빈번한 회의소집, 방문요구 및 인허가 신청자 등에 대한 특별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기 등 공무원들의 소위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 10가지를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으로 제정·선포했다.

시민단짜이 되는 산하기관의 변화와 혁신,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서울시는 2014년 11월, 시민 생활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8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단짜이로 거듭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 18개 전 투자·출연기관을 아울러 마련된 최초의 조직혁신방안이다.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지하철 양공사(2014년 12월), SH공사(2015년 3월), 서울시설관리공단(2015년 3월), 서울의료원(2015년 3월), 서울산업진흥원(2015년 4월), 서울신용재단(2015년 4월), 서울여성가족재단(2015년 5월), 서울농수산식품공사(2015년

6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2015년 7월) 등 기관별 혁신방안 및 시민과의 혁신약속을 발표했다.

인사가 잘 풀려야 시민이 만사형통, 인사·감사혁신 등 공직혁신대책

2014년 12월,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전체 공무원 1만 명 중 현재 약 17%(1,644명) 수준인 전문가 공무원을 2020년까지 54%(5,370명)로 확대해 글로벌·다문화시대, 행정 융·복합 시대에 맞는 진용을 갖추는 한편, 장애인·저소득층·고졸자 등 사회적 약자 채용도 법정 의무채용 비율보다 대폭 확대하여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1월, 박원순법 시행에 따른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는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자체감사기구를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하여 공정성·독립성·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정감시 기능을 담당해 온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고충·민원처리 전담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직화를 위해 감사직류를 도입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재정혁신, 채무 7조 원 감축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1월, 취임 이후 2012년 예산안을 통해 채무 7조 원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피나는 자구적 노력을 통해, 2016년 6월 기준 7조 6,669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여 공약 목표를 달성하였다. 채무 7조 원 감축은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과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재정혁신의 사례로 전 세계 어느 국가나 도시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성과였다. 이를 위해 2012년 5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소하여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했으며, 2012년 10월에는 채무실태와 원인 등에 대한 재정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채무관리 및 재정건전화 방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변혁, 공공조달혁신방안

2012년 3월, 불공정 하도급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 2012년 5월에는 시·구·투자출연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행태 등 사회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12년 11월에는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턴키발

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12월에는 효율성·경제성 위주의 기존 계약 제도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2015년 12월에는 과세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등 납세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세정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박원순법

2014년 8월

김영란법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 발표



39%

2015년 11월(시행 1년),
비위 발생건수 39% 감소, 시민 51.2%, 공무원 93% 긍정 평가



甲乙관계 혁신대책,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2014년 8월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관계 혁신대책 발표



2014년 11월

박원순법 및 갑을관계 혁신의 확산을 위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발표



인사·감사 등 공직혁신방안



2014년 12월
공무원 전문가 및 개방직 확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인사혁신방안 발표



2015년 1월
시장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설치,
서울시 감사기구 혁신방안 발표



재정혁신, 채무 7조 원 감축



2011년 11월 2012 서울시 예산안 및 채무 7조 원 감축계획 발표



2012년 5월 지자체 최초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2016년 6월 채무 7조 6,669억 원 감축

국내 지방자치제가 만 20년 됐습니다.
그러나 국내 지방자치는 아직도 중앙정부에 예속된
미성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간에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국가가 아닌
중앙자치국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재정과 사무가 20%인 점을 빗댄
2할 자치라는 냉소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역 등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분권형 구조가 선순환 할 때,
비로소 국가의 신성장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적 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도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한 서울의 비전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부활한 이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만 20년이 되었다. 지방자치가 이제 성인이 된 나이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중앙정부에 예속된 미성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항간에 대한민국은 지방자치 국가가 아닌 중앙자치국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재정과 사무가 20%인 점을 빗댄 2할 자치라는 냉소마저 나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표현이다.

지방정부가 정책계획과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자율권을 확보해나갈 때 비로소 지역 실정에 맞고 시민 피부에 와닿는 행

정서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이것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될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한 지자체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각 지자체 간의 상생발전을 가져올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도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분권형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에 도시경쟁력, 국가경쟁력의 명운이 걸려 있다. 상생과 자치의 길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있다. 시민이 행복하면, 도시가 행복해진다. 도시가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해진다. 이 단순명료한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현실

**세계적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21세기 세계 경쟁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화된 도시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제도적 자치권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이 중앙정부에 크게 예속되어 있는 등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있는 세입구조의 한계

지방자치 20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 세입은 8:2 구조로 변함이 없으나, 지방의 지출 규모는 크게 늘어나고 있어 공공재정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육·교육·의료·노령연금 등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국단위 복지재정을 오히려 지방정부에 상당 부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한 서울의 실천

자치분권의 핵심, 자치구 자주재정권 실현

2015년 7월,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97.1%에서 100% 수준까지 지원하는 2,862억 원의 재정교부금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서울시 자치구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사업의 추가부담금으로 인해 1,20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사회적 약자와 보육을 위한 예산인 만큼 서울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 지원하도록 결정했고, 2016년부터는 재정교부금 2,86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자치구의 자주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2013년 5월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선공약과 전국시도지사간담회를 통해 무상보육 재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져야 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무상보육 혼란이 불가피해지자, 2013년 9월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무상보육재정을 모두 부담하는 결정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 무상보육 혼란은 방지할 수 있었고, 2014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5% 포인트 인상 및 지방소비세율 6% 포인트 인상을 견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6년 무상보육재정을 지방교육청에 전액 전가시키고, 지방교육청은 예산편성을 일부분 밖에 못함으로써 무상보육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취임 이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광역발전협의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자주재정권 확대, 자치조직권(인사권) 강화,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마련하여 정책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서울연구원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자치분권·상생발전과 관련된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4년 4월 미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와 리더십 형성, 2015년 4월에는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10월 서울지방분권 국제포럼, 11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다양화 방안, 12월 국가 및 지방재정의 미래전망과 대응방안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한편 2015년 9월에는 지방자치 20년 정부 기조에 맞추어 조직운영 자율성·책임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삽니다, 균형발전과 지역상생 발전

서울시는 2012년 5월, 서울시립승화원의 운영권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었던 고양시와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상생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3년 11월, 진주시와 축제발전 협력서에 합의함으로써 극심한 갈등을 겪던 유등축제 갈등을 해결하고, 유등축제 공동 발전 및 상호방문은 물론 두 도시 간 지역협력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15년 6월에는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를 통해 지역감정으로까지 갈등이 고조되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다양한 광역적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간, 도시 간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지역상생과 균형발전에 가치를 두고 갈등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2014년 7개 지자체 협력사업인 지방학

사를 준공했고, 2012년 이후 수도권 및 수원시·완주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상생협약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7월에는 서울·인천·경기 도시 간 수도권정책협의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2015년 6월에는 서울시 등 19개 지자체가 모여 지역과 함께, ‘서로살림 2015 지역상생포럼’을 개최했고, 지역상생포럼을 통해 서울시는 지역상생을 위한 9대 실천방안 및 3대 약속을 제시했다.

지역상생을 위한 서울시 실천방안과 약속 | 2015. 6. 4 |



서울시 9대 실천방안

- ① **건강한 먹거리, 함께 만든다** : 2018년까지 상설직거래시장 30개소 확대
- ② **즐거움과 행복, 함께 누린다** : 2018년까지 지역관광명소 2,000개소 확대·발굴
- ③ **폐교, 함께 가꾼다** : 2018년까지 20개 이상 폐교 리모델링해 숙박형 자연캠핑장 조성
- ④ **우리 아이들, 함께 키운다** : 농촌유학 맛보기캠프 등 도농친화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 ⑤ **일손과 일감, 함께 나눈다** : 중장년층, 청년층 사회적경제 연계 도농일자리 파견
- ⑥ **귀농·귀촌 확대, 함께 노력한다** : 2018년까지 맞춤형 영농교육 1,100명 2배 이상 확대
- ⑦ **주거비걱정, 함께 해결한다** : 공공기숙사 조성 및 확대(강서구 내발산동 조성 완료)
- ⑧ **좋은 정책, 함께 공유한다** : 서울혁신파크, 충남희망택시 등 우수정책 교류 및 공유
- ⑨ **아픈 마음, 함께 위로한다** : 매년 10억 원 규모 구호기금 출연, 구호물품 지원 등

서울시 3대 약속

- ① 900~1,650m² 규모의 지역 홍보 플랫폼인 지역홍보센터 설립
- ② 도농상생지원센터 설치 : 상생교류사업 지원, 상생교류활동가 양성, 지역자원 발굴 등
- ③ 2018년까지 일반예산 및 대외협력기금 총 500억 원 마련

핵심사업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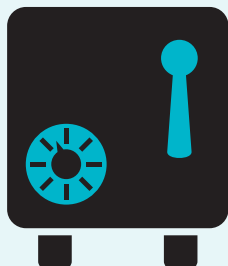


지방재정권 확충



2013년 5월 무상보육재정 국무회의 논의,
2013년 9월 무상보육 위한 2,000억 원 지방채 발행

15%p
6%p



2014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5% 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율 6% 포인트 인상



2,862



2015년 7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위한 재정교부금(2,862억 원) 확대 발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

수도권광역발전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 공동 협력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회·정부 건의사항 채택 및 반영 요청



2015년 9월
지방자치 20년 정부 기조에 따른
조직운영 자율성·책임성 확대방안 마련



2015년 지방분권 국제포럼 등
지역상생·지방분권 개최 및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출범



균형발전과 지역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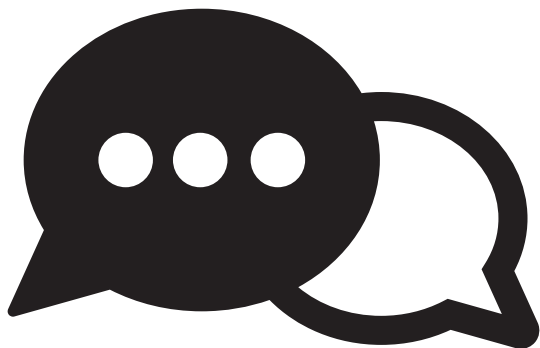


2014년 7월 수도권정책협의회 출범,
기초자치단체 상생교류협력 및 갈등해소 적극 추진



2015년 6월 서울시 등 19개 지자체
2015 지역상생포럼 개최, 지역상생 9대 실천방안 발표

우리는 지난 시대를 통해,
시민과 불통하는 행정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시민들로부터 괴리된 정치가
얼마나 깊은 갈등과 충돌을 낳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성취도 중요하지만,
먼저 행정의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통, 참여, 거버넌스의 세 가지 길을 통해,
‘시민이 시장인 서울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청책, 숙의, 시민발언대, 명예부시장, 현장시장실, 시민청,
그리고 온라인의 소셜미디어센터와 주민참여예산제까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협력하는 행정으로 혁신했습니다.



소통과 협치



‘시민이 시장인 도시 서울’의 비전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이통안민(以通安民)’, 즉 “소통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한다”를 시정의 뿌리로 삼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시민과의 소통이 굳건한 뿌리가 된다면 어떤 정책, 어떤 행정이 펼쳐지더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서울은 변하고 있다. 일방적인 통보나 형식적인 절차 대신에 쌍방향적인 소통과 협업이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갈등은 줄어들고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성취도 중요하지만, 먼저 행정의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듣지 않으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는다. 듣지 않고 시작한 변화와 혁신은 결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것, 그것이 말 그대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서울시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깊이 들어야 공감할 수 있다. 무엇이든 말할 수 있어야 믿음이 싹튼다. 한 발 떨어져 다른 눈으로 보아야 바꿀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1,000만 시민 시정의 시대를 열 수 있다.

행복한 변화는 진실한 소통에서 시작한다. 시민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분 좋은 변화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항상 귀를 열어 두어야 한다. 시민과의 소통을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정으로 굳건히 자리 잡는 것이 소통행정의 미래다. “다시,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이 서울이다.”

불통사회의 현실

참사, 불통 그리고 질타

국민여론이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제대로 전달되느냐에 여전히 의문이 있다. 이는 최근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수습 과정, 국

회법 개정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에서도 드러났다. 국민의 바람은 ‘참사·불통·질타’ 보다 ‘만사(萬事)·소통·타협’의 국정운영과 정치다(〈매일신문〉, 청와대통신, 2016. 1. 1.).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길, 시민 중심의 협치 행정으로의 진화

제주도의 원희룡 협치 도정, 경기도의 남경필 연정 도정. 대립과 갈등과 분열을 초월한 상생과 협력과 통합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 전반에 걸쳐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깊이 개입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는 양분된 가치가 충돌하여 한편이 무너지고 한편이 모든 가치를 가져가는 시대가 아니어야 한다. 우리들의 정치도 바뀌어야 하고 사회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위한 서울의 실천

박원순표 민주주의의 실험, 박원순프로세스 정착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1월 26일, 희망온돌프로젝트 발전방

안 청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박원순프로세스에 시동을 걸었다. 듣고, 토론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집행하는 과정의 박원순포 민주주의의 실험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은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한껏 기울인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 정책을 가다듬어 내놓고 있다. 참여민주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이른바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이다. 박원순프로세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청책’, 전문가 등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숙의’,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실현해가는 ‘협치’를 이루어 가는 ‘현장 → 청책 → 숙의 → 정책 발표 → 협치’의 과정이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시장실

2012년 11월 1일, 입주 4년이 지나도록 600여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은평뉴타운 문제를 시작으로 3년여간의 현장시장실을 운영했다. 총 26개의 자치구를 방문했으며 150개 현장방문, 386개 현안사업에 답하는 등 현장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파악하고 자치구, 지역 주민, 전문가, 관련 단체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다. 우문현답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뜻으로 현장에서 직접 보아야만 문제의 본

질과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서울시의 시정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새로운 뜻을 가진 단어이다. 현장시장실은 자치구 주요 현안이나 시책과 관련해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단체와 소통하며,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의 현장행정이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서울시 만들기, 정책토론회

서울시는 2011년 11월 26일, 희망온돌프로젝트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서울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했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그동안 서울시가 주제를 정하고 관련 시민, 전문가 등을 초청해 진행하는 형식에서 큰 틀의 주제는 서울시가 제시하지만 그에 맞는 세부 주제는 물론 토론 운영 방법 등을 시민이 직접 기획해 제안하는 정책토론회 2.0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廳)은 변화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이며, 책(策)은 시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된다는 의미다. 즉, 정책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마련해나가는 협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11월 희망온돌을 시작으로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된 청책토론회는 2016년 6월까지 총 100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참석한 시민 수는 1만 4,817명에 달하며, 제안된 시민의견은 총 1,662건으로 그중 75%가 정책에 반영되었다. 2013년 청책토론회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상·하반기 각각 81%, 8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서울은 소셜미디어특별시(SNS행정)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1월 16일, 1,000만 시민행정의 시작을 세계 최초 온라인 취임식으로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소셜미디어특별시 서울을 알리는 출발점이었다. 2012년 7월에는 소셜방송인 라이브서울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2년 11월에는 소셜미디어센터(SMC)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2013년 5월 카카오톡 서울을 오픈했고, 2014년 6월 서울시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2009년 12월 트위터와 2011년 3월 페이스북 등 5대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 7월에 제2기 서울시 SNS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2013년 7월에 긴급재난 전달체계인 트위터 라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해가고 있다. 5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재난·위기 상황에 시민들에게 전달한 긴급

메시지는 2년여간(2012년 11월~2014년 12월) 139건,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민원·의견 접수는 2만 8,289건에 달했다. 또한 서울시 5대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약 39만 명(2015년 6월 기준, 블로그 제외)이며, 서울시 5대 소셜미디어 채널들은 평균 2년 5개월 만에 5만 이웃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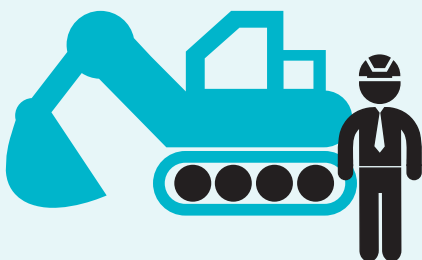
구체적인 정책이나
성취도 중요하지만,
먼저 행정의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핵심사업 주요성과

박원순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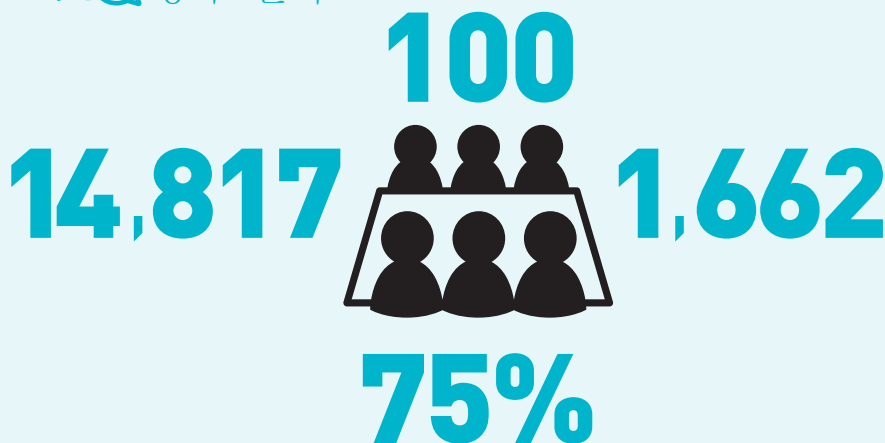
현장시장실



2012년 11월 1일
완판시장의 별칭을 얻게 된
은평뉴타운 현장시장실 현장행정 시동



2012~2015년 3년간
총 26개 자치구, 150개 현장방문 386개 현안사업에 답하는
현장시장실 운영



민선 5~6기(2011년 11월~2016년 6월)
총 100회 개최, 1만 4,817명 참석, 1,662건 의견접수, 반영비율 75%



2011년 11월 16일 1,000만 시민행정의 시작,
세계 최초 온라인 취임식 개최

LIVE
SEOUL



2012년 7월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운영,
2012년 11월 소셜미디어센터 시범운영 시작

| 서울을 바꾸는 정책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

지은이 서울연구원

초판1쇄인쇄 2016년 7월 15일

초판1쇄발행 2016년 7월 29일

펴낸이 김수현

펴낸곳 서울연구원

편집 신창호, 김인희, 전말숙, 정지은

디자인 립霖 디자인

인쇄·제본 현문인쇄

자료제공 서울특별시청 이원강, 김영수

자료정리 안균오, 조희정, 안누리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19

홈페이지 www.si.re.kr

ISBN 979-11-5700-119-4 04300

979-11-5700-113-2 (세트)

© 서울연구원, 2016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연구원에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 / 지은이: 서울연구원. -- 서울 :
서울연구원, 2016
p. : cm. -- (서울을 바꾸는 정책)

ISBN 979-11-5700-119-4 04300 : ₩10000
ISBN 979-11-5700-113-2 (세트) 04300

정책[政策]
서울(특별시)

359.116-KDC6
352.1409519-DDC23

CIP2016016519